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66-10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연혁 / 3
2.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5

제 2 부 | 2020~2024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 15
2. 재정운용 여건 / 17

제 3 부 |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3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5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46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57
2. 교육 분야 / 73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86
4. R&D 분야 / 97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08
6. SOC 분야 / 127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139
8. 환경 분야 / 150
9. 국방 분야 / 171
10. 외교·통일 분야 / 181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90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209

제 5 부 | 재정혁신 방향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1) 지출 구조조정 / 221
- 2) 지출구조 개선 / 222
- 3) 협업예산 활성화 / 223

2. 수입기반 확충

- 1) 비과세·감면 정비 / 224
- 2) 탈루소득 과세 강화 / 225
- 3) 재원의 효율적 활용 / 226

3. 투자자원 다변화

-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27
- 2) 국유재산 활용 확대 / 229

4.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231
- 2) 국고채 안정적 관리 / 232

5. 재정관리체계 혁신

- 1) 성과관리제도 개편 / 234
- 2)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 235
- 3)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 / 237
- 4) 공공계약제도 개선 / 238

6.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1)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240
- 2)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확산 / 242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연혁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매 년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도 중요하다.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전략적 재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에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발전으로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전략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을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재정수지의 전망,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역시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2.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각 부처에 계획 수립지침 통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0년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등 폭넓은 의견 수렴

2019년 10월부터 분야별 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을 구성하여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5월 25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7월 20일에는 공개토론회, 8월 25일에는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8월 4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 198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기재정계획 작성

- 정부는 재원배분에 있어 중기적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였다. 초기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적자 전망이나 적자축소 계획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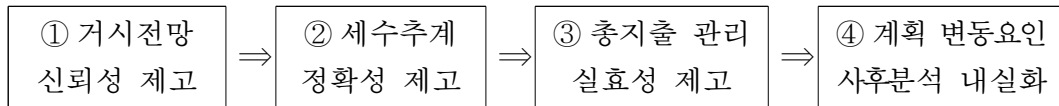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 2004년에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정부는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계획기간 중의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 및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 중기 시계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

- 2005년부터는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중기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제시함으로써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전문가, 정책고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 일련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 추진



1. 거시전망의 신뢰성 제고

- 최근까지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거시전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연구기관·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수립시 경제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경기상황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중 2회 실시하여 경제전망과 체감경기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 그간의 추진노력 >

- ① 주기적으로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연구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민간경제 전문가 간담회」 수시 개최('19.3월 이후 총 5회)
 - 「거시경제TF」(차관보 주재) 등 실무회의를 통해 한은, KDI 등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과 경제상황 인식 공유
- ②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수립시 경제전문가·일반국민* 대상으로 경기상황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연 2회 : 7월·12월)
 - * 일반국민(1,000명), 전문가(300여명, 기업인·교수·연구원 등)

- 앞으로도 전망모형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IMF·OECD, 해외 IB 등 유수 해외기관의 전망 결과 등도 보다 면밀히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2.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그동안 세수추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19년에는 국세수입 오차율을 △0.5% 수준까지 개선한 바 있다.

< 그간의 추진노력 >

- ① 세수추계 TF*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관별 의견수렴 강화
 - * 국세청·관세청·조세연 등과 함께 모형 개선사항 및 세입여건 점검 / ** KDI, 민간기업 협회 등
- ②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여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③ 조세연과 함께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전문연구원을 채용하여 전문성 보강
- ④ 세수추계의 전제·오차원인·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개정, '19.4월)
- ⑤ 세수추계 정확도와 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책임성 강화

- 앞으로도 세수추계 TF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거시경제지표 전망 표준화, 세목별 추계모형 개선 등 세수추계 모형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총지출 관리 노력 강화

(1) 중기 재정지출 소요 관리 노력 확대

-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7조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20.5월) 최근 3년간('17~'19년) 중앙관서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재정지출 소요를 추계하지 않거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 운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앞으로는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 수립시 국가재정법 및 관련 지침*상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 재정지출의 필요성, 추계의 타당성,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 협의 내용 규정

-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시(매년 12월) 법상 협의 의무와 협의지침상 사전에 협의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협의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 소요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사전협의 절차가 보다 엄격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의무지출 세부내역 기술 범위 확대

-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 계획기간의 경직적인 지출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의무지출 항목별 소요전망과 증감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전체 의무지출의 86%에 상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의무지출 기술 범위를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미기술된 사업은 100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

- 또한 주요 의무지출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의무지출 총괄표를 산입하는 등 기술방식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재정준칙 도입 검토

-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총지출 관리를 위해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4. 중기계획 변동 요인 사후 분석·평가 내실화

-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초계획의 변동사항·요인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 제7조③)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 앞으로 평가·분석 보고서 작성시 경제·재정여건 변동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연동계획으로서 기존·신규 중기 재정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각계 의견수렴 활동 강화

-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중기 재정계획 분야별 지원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공개토론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도 병행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병행하였다.
-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구조적 과제 지속 대응 및 포용강화·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점

- 고용·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 생활편의 증진과 안보·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다.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19*	'20	'21	'22	'23	연평균 증가율(%)
▪ 총수입	476.1	482.0	505.6	529.2	554.5	3.9
- 국세수입	294.8	292.0	304.9	320.5	336.5	3.4
▪ 총지출	469.6	513.5	546.8	575.3	604.0	6.5
▪ 재정수지	△37.6	△72.1	△81.8	△85.6	△90.2	
(GDP 대비, %)	(△1.9)	(△3.6)	(△3.9)	(△3.9)	(△3.9)	
▪ 국가채무	740.8	805.5	887.6	970.6	1,061.3	
(GDP 대비, %)	(37.1)	(39.8)	(42.1)	(44.2)	(46.4)	

*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0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용,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
 - 기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 자금을 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 재정의 회계구조 >

구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수	1개	20개	67개
규모	총지출 512.3조원*		
내 용	세 입	세 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 ▪ 관세 ▪ 교통세 ▪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일반지방행정 ▪ 농림수산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교통시설 ▪ 농어촌구조개선 ▪ 지역발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 '20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제 2 부

2020~2024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제2부 2020~2024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1) 대외 여건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하반기에는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와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상반기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부터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2/4분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반등하였다.

* 中 성장률(전년동기비, %) : ('19.1/4)6.4 (2/4)6.2 (3/4)6.0 (4/4)6.0 ('20.1/4)△6.8 (2/4)3.2

다만,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재확산 추세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2021년 이후

향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글로벌 이동성 회복, 이연수요 표출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도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 주요국간 통상 갈등, 신흥국 경제불안 등이 세계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9	'20	'21
세 계	2.9	△4.9	5.4
- 선진국	1.7	△8.0	4.8
- 신흥국	3.7	△3.0	5.9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IMF, '20.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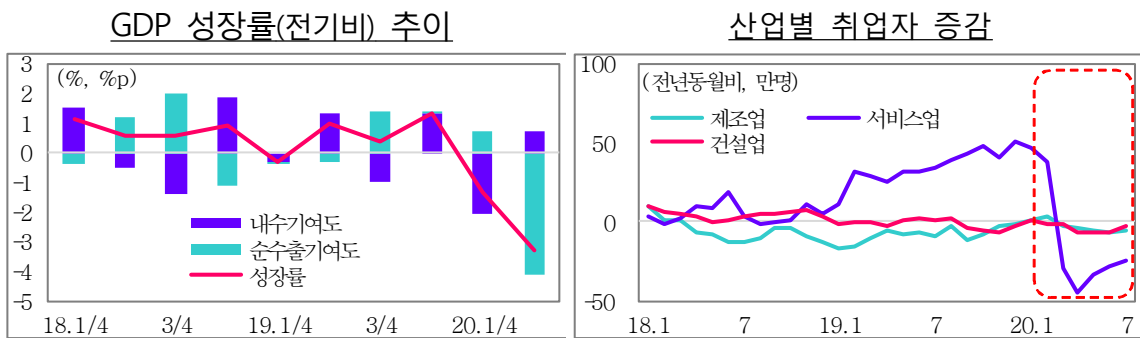
2) 대내 여건

2020년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국내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및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대규모 수해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고용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충격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통계청

2021년 이후

2021년 이후 코로나19 사태 진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내수 등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세계 성장과 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IMF) : (성장)△4.9→5.4 (교역)△11.9→8.0

다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비대면·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저탄소·친환경 경제 요구 증대, 양극화 심화 우려 등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 회복 및 지속을 위한 구조적 변화 대응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 국세수입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020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2021년 국세수입 증가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1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증가율 둔화 등으로 2019~2023년 계획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입 여건은 다소 유동적일 것이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추세 감안시 2019~2023년 계획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2) 재정지출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의무지출 소요 지속 증가 전망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의 노력으로 복지지출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노력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의무지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복지지출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소요도 증가

대내외 여건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수출·생산 부진을 완화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금융, 조달 등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를 이끌어갈 혁신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자연·사회재난 대응 역량 및 방역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각 부처가 요구한 2020~2024년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7.5% 수준

2020년 1월말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7.5%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증가율 6.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 '19~'23년 계획 대비 '20~'24년 부처요구 >

(단위 : 조원, %)

구 분	'19	'20	'21	'22	'23	'24	증가율
▪ '19~'23년 계획(A)	469.6	513.5	546.8	575.3	604.0		6.5
▪ '20~'24년 부처요구(B)*		512.3	579.4	620.3	648.0	685.3	7.5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32.6	45.0	44.0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20.1월말)

제 3 부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제3부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금년들어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역동성 회복, 포용기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역동성 회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포용국가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경제기반을 조성하여 전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 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조정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수입기반 확충 등 과감한 재정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 및 관행적 보조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부처 협업예산을 재정 전반으로 확산하여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해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성과는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실시하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연금·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정준칙과 순채무 등 보완지표 도입을 검토하여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자산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자산 개념 정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재정 관리·운용의 혁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 재정수입¹⁾은 연평균 3.5% 증가 전망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총수입)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인 3.9%를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81.8	470.7	483.0	505.4	527.8	552.2	3.5
(증가율)	(1.2)	(△1.1)	(0.3)	(4.6)	(4.4)	(4.6)	
○ 국세수입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2.8
○ 세외수입	27.9	29.1	28.6	28.9	29.9	30.2	2.0
○ 기금수입	161.9	161.9	171.6	180.0	187.8	196.6	5.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1) 총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2.8% 증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세수입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2.8
(증가율)	(△0.9)	(△5.1)	(△3.1)	(4.8)	(4.6)	(4.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세외수입은 연평균 2.0% 증가

세외수입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간 28~30조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세외수입	27.9	29.1	28.6	28.9	29.9	30.2	2.0
(증가율)	(4.8)	(9.5)	(2.5)	(1.1)	(3.6)	(0.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기금수입은 연평균 5.0%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에 따라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기금수입	161.9	161.9	171.6	180.0	187.8	196.6	5.0
(증가율)	(4.7)	(4.7)	(6.0)	(4.9)	(4.3)	(4.7)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조세부담률은 2021년까지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2020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2021년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은 2021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2년부터는 경제 회복 및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다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도 2021년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조세부담률	19.3	18.7	18.8	18.9	19.0
■ 국민부담률	27.2	26.6	26.7	27.0	27.3

* 3차 추경 기준

■ 조세부담률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 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 이를 더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 \text{국민부담률} = \text{조세부담률} + \text{사회보장부담률}$$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단위 : %, '18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17년)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9.9	18.2	18.8	27.1	30.0	24.9
국민부담률	26.7	24.3	31.4	33.5	46.1	34.3

* 자료 : OECD Statistics

2) 재정지출

(1) 총괄

■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7%

정부는 2020~2024년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7%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한국판 뉴딜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마련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512.3	546.9	555.8	589.1	615.7	640.3	5.7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51.1	374.1	370.9	394.8	411.3	423.8	4.8
(비중)	(68.5)	(68.4)	(66.7)	(67.0)	(66.8)	(66.2)	
○ 기금지출	161.1	172.8	184.9	194.3	204.4	216.5	7.7
(비중)	(31.5)	(31.6)	(33.3)	(33.0)	(33.2)	(33.8)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55.6	255.1	267.3	282.5	295.7	314.2	5.3
(비중)	(49.9)	(46.7)	(48.1)	(48.0)	(48.0)	(49.1)	
○ 재량지출	256.6	291.8	288.5	306.6	320.0	326.1	6.2
(비중)	(50.1)	(53.3)	(51.9)	(52.0)	(52.0)	(50.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2) 의무지출

■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3%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에 따라 연평균 5.3% 증가할 전망이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복지분야 법정지출	119.7	123.2	131.5	139.9	148.8	160.6	7.6
▪ 지방이전재원	111.6	107.8	108.7	113.9	117.2	122.9	2.4
▪ 이자지출	17.0	16.9	19.3	21.1	22.4	23.3	8.2
▪ 기타 의무지출	7.4	7.2	7.7	7.7	7.4	7.4	0.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3) 재량지출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조기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6.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중복사업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의무지출	2,556,479	2,672,850	2,825,373	2,956,833	3,142,308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1,196,633	1,315,370	1,398,655	1,487,701	1,606,394
○ 국민기초생활보장	136,861	150,082	159,672	171,626	184,559
- 생계급여	43,379	46,079	48,936	51,970	55,192
- 의료급여	70,038	76,805	83,546	91,232	99,625
- 주거급여	16,305	19,879	19,659	20,612	21,612
- 교육·해산장제·자활	7,139	7,320	7,532	7,813	8,130
○ 건강보험	98,510	104,431	110,921	119,723	130,991
- 가입자지원(일반)	70,826	75,834	79,987	86,271	94,598
- 가입자지원(기금)	18,801	19,167	20,682	22,309	24,280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8,883	9,431	10,252	11,143	12,113
○ 4대 공적연금	513,332	561,626	598,919	638,786	692,506
- 국민연금	266,034	295,116	316,797	341,118	377,094
- 공무원연금	174,186	188,987	199,893	210,424	222,813
- 사학연금	38,455	42,096	45,400	48,977	52,849
- 군인연금	34,657	35,426	36,829	38,267	39,749
○ 노인부문	145,950	166,742	177,686	189,328	202,068
- 기초연금	131,765	149,635	158,292	166,545	175,253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4,185	17,107	19,395	22,783	26,815
○ 아동·보육부문	56,996	55,872	52,952	51,487	51,728
- 영유아보육료	34,162	33,677	31,964	31,549	32,325
- 아동수당	22,834	22,195	20,989	19,938	19,404
○ 고용·노동부문	177,614	205,890	225,221	242,187	269,138
- 구직급여	95,158	113,486	126,991	138,103	159,013
- 산재보험급여	59,046	65,236	69,802	74,688	79,916
○ 보훈부문	46,880	47,677	48,846	49,881	50,255
- 보상금, 6.25자녀수당	32,174	33,479	34,586	35,967	36,837
- 무공, 참전수당	7,466	6,817	6,876	6,529	6,031
- 보훈, 위탁병원진료	6,085	6,205	6,205	6,205	6,205
- 기 타 (자녀학자금 등)	1,155	1,175	1,178	1,180	1,182
○ 기 타	20,490	23,050	24,438	24,682	25,149
② 지방이전재원	1,116,107	1,087,415	1,138,873	1,171,681	1,229,350
○ 지방교부세	522,068	517,646	544,422	569,077	596,85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3,221	561,558	602,604	632,499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40,316	36,547	32,892	-	-
③ 이자지출	169,857	193,226	210,759	223,786	232,583
○ 공공자금관리기금	126,919	156,704	170,020	182,241	193,320
○ 주택도시기금	15,244	11,408	12,992	13,721	10,878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535	11,667	13,520	13,689	13,858
○ 기 타	13,160	13,447	14,226	14,135	14,527
④ 기타 의무지출	73,882	76,839	77,086	73,666	73,981
○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 유엔 PKO 예산분담금	1,543	2,210	1,571	1,618	1,667
○ 기 타	48,729	51,019	51,906	48,438	48,704

■ 복지분야 법정지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20년 13.7조원에서 2024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7.8%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소요 추정시 수급자수, 가구당 인원수 등은 기 산정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도 고려하였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2020년 4.3조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4년에는 5.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20년 7.0조원에서 2024년 10.0조원으로 9.2% 수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현실화 등으로 2020년 1.6조원 수준에서 2024년 2.2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36,861	150,082	159,672	171,626	184,559	7.8
▪ 생계급여	43,379	46,079	48,936	51,970	55,192	6.2
▪ 의료급여	70,038	76,805	83,546	91,232	99,625	9.2
▪ 주거급여	16,305	19,879	19,659	20,612	21,612	7.3
▪ 교육·해산장제·자활	7,139	7,320	7,532	7,813	8,130	3.3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2020년 9.9조원에서 2024년 13.1조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회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상당액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6% 상당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021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등을 지속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0.5조원 가량 증액된 9.5조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시행과 함께 일반회계 지원은 2022년까지 8.0조원,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모는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수준인 1.9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2.1조원,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2023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의 2021년 예산은 전년 수준 보험료 인상율(3.2%)을 가정하여 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024년까지는 보험료 인상,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8.1%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98,510	104,431	110,921	119,723	130,991	7.4
▪ 가입자 지원(일반)	70,826	75,834	79,987	86,271	94,598	7.5
▪ 가입자 지원(기금)	18,801	19,167	20,682	22,309	24,280	6.6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8,883	9,431	10,252	11,143	12,113	8.1

③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2020년 26.6조원에서 2024년 37.7조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1만명에서 2024년에는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20년 17.4조원에서 2024년 22.3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원 증가(2020년 53.3만명 → 2024년 65.5만명, 연평균 5.3%)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20년 3.8조원에서 2024년 5.3조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2020년 12.4만명에서 2024년 15.8만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하는데, 이는 연금선택률 및 퇴직자 증가, 수급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5년 평균 수급자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기금 의무지출은 2020년 3.5조원에서 2024년 4.0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및 수급인원 증가(11.3만명→12.3만명)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순증 인원(2,181명)을 연금지급금 전망에 반영하였다.

<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513,332	561,626	598,919	638,786	692,506	7.8
▪ 국민연금	266,034	295,116	316,797	341,118	377,094	9.1
▪ 공무원연금	174,186	188,987	199,893	210,424	222,813	6.3
▪ 사학연금	38,455	42,096	45,400	48,977	52,849	8.3
▪ 군인연금	34,657	35,426	36,829	38,267	39,749	3.5

④ 노인부문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액('21년부터 수급자 전체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0년 약 13.2조원(국비 기준)으로 2020~20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7.4%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보험료 국가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 진행에 따라 2020년 1.4조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연평균 1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전년보다 0.3조원 확대하여 법정 국고지원 비율인 20%를 지원한다.

<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45,950	166,742	177,686	189,328	202,068	8.5
▪ 기초연금	131,765	149,635	158,292	166,545	175,253	7.4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14,185	17,107	19,395	22,783	26,815	17.3

⑤ 아동·보육부문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아동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가 부담액은 2020년 5.7조원에서 2024년 5.2조원으로 연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소요 추정시 장래인구특별추계('19.3 통계청)을 활용하여 수급자수를 추정*하고, 지원대상 및 단가 등은 기 산정방식을 유지하였다.

* '20.5월까지 실제 출생아수를 반영하고,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적용 :
('20) 283천명, ('21)290천명 ('22)300천명, ('23)312천명, ('24)324천명

주요 사업별로 보면, 만7세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수 감소추세로 인해 2020년 2.3조원에서 2024년에는 1.9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도 아동수 감소추세로 인해 2020년 3.4조원에서 2024년 3.2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1.4%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아동·보육부문 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56,996	55,872	52,952	51,487	51,728	△2.4
▪ 영유아보육료	34,162	33,677	31,964	31,549	32,325	△1.4
▪ 아동수당	22,834	22,195	20,989	19,938	19,404	△4.0

⑥ 고용·노동부문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근 집행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 9.5조원에서 2024년 15.9조원으로 연평균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급여는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8개 급여와 진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진폐연금(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급여를 통해 치료비, 장례비, 생활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산재보험급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9개→14개 직종), 출퇴근재해 보상 도입, 중소기업주 특례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지급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2020년 5.9조원에서 2024년 8.0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77,614	205,890	225,221	242,187	269,138	10.9
▪ 구직급여	95,158	113,486	126,991	138,103	159,013	13.7
▪ 산재보험급여	59,046	65,236	69,802	74,688	79,916	7.9

⑦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헌과 희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및 6.25자녀수당은 보상금단가 인상, 그간의 인원 증감 추세를 고려할 때 2020년 3.22조원에서 2024년 3.6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무공, 참전수당은 2020년 0.75조원에서 2024년 0.60조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의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 인원은 자연감소하나 노령화에 따른 1인당 진료횟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0년 0.61조원에서 2024년 0.62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보훈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46,880	47,677	48,846	49,881	50,255	1.8
▪ 보상금, 6.25자녀수당	32,174	33,479	34,586	35,967	36,837	3.4
▪ 무공, 참전수당	7,466	6,817	6,876	6,529	6,031	△5.2
▪ 보훈, 위탁병원진료	6,085	6,205	6,205	6,205	6,205	0.5
▪ 기타 (자녀학자금 등)	1,155	1,175	1,178	1,180	1,182	0.6

■ 지방이전재원²⁾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 담배값 개별소비세의 45% 제외(소방안전교부세)

2017년부터는 교육세 일부를 세입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이전재원 중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교육세 등 세입 전망치와 의무지출 사업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2021년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세입 둔화 등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2.9조원 감소하고, 이후 세입 증가에 따라 2020년 111.6조원에서 2024년 122.9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이전재원 전망 >

(단위 : 조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합 계 】	111.6	107.8	108.7	113.9	117.2	122.9	2.4
▪ 지방교부세	52.2	50.3	51.8	54.4	56.9	59.7	3.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5	53.3	56.2	60.3	63.2	3.4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4.0	4.0	3.7	3.3	-	-	-

-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년 13.27%에서 2006년 19.24%(내국세 대비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은 1995년 11.8%에서 2020년 20.79%로 상향조정되었다.

■ 이자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2.7조원에서 2021년 15.7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 19.3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는 부동산 등기·등록 시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인데, 2016년 이후 주택 거래량 안정화 및 저금리 추세에 따른 발행금리 인하(2016년 1.5%→2020년 1.0%)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1.5조원에서 2024년 1.1조원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우체국예금 지급이자는 금융수수료 면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예금 수신고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2020년 79조원 → 2024년 90조원), 금융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조달금리 하락(2020년 1.65% → 2024년 1.54%)하여 지급이자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기준 1.5조원에서 2022년 1.4조원으로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 이자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합 계 】	169,857	169,048	193,226	210,759	223,786	232,583	8.2
▪ 공공자금관리기금*	126,919	127,649	156,704	170,020	182,241	193,320	11.1
▪ 주택도시기금	15,244	15,244	11,408	12,992	13,721	10,878	△8.1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535	13,035	11,667	13,520	13,689	13,858	△1.2
▪ 기 타	13,160	13,120	13,447	14,226	14,135	14,527	2.5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 총지출 기준

■ 기타 의무지출

① 공익기능증진직불금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은 생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유지,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ha당 연간 100만원~ 205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은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금을 통합하여 2020년 신규로 도입된 직불금으로 2024년까지 현 재정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② 유엔 PKO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은 미납예상액(2020년 추경 감액분 406억원 등)보전에 따라, 2020년 1,543억원에서 2021년 2,210억원으로 증가하나, 2022년 이후 안정화되어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전망된다.

< 기타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합 계 】	73,882	72,222	76,839	77,086	73,666	73,981	0.0
▪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23,610	-
▪ 유엔PKO예산분담금	1,543	1,137	2,210	1,571	1,618	1,667	1.9
▪ 기 타	48,729	47,476	51,019	51,906	48,438	48,704	△0.0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³⁾는 2024년 △5% 중반 수준으로 관리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2020~2024년 계획 기간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2024년 GDP 대비 △5%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수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5% 후반 수준이 지속되다가, 2024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함으로써 GDP 대비 △5% 중반 수준까지 축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지속 등으로 2024년 △3% 후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123.2	△128.2	△127.5
(GDP대비, %)	(△3.5)	(△5.8)	(△5.4)	(△5.9)	(△5.9)	(△5.6)
※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83.7	△87.9	△88.1
(GDP대비, %)	(△1.5)	(△3.9)	(△3.6)	(△4.0)	(△4.0)	(△3.9)
■ 경상 GDP 성장률	0.6*		4.8	4.0	4.0	4.0

* '20.6.1 발표

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

■ 국가채무는 2024년까지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차례 추경에 이어 2021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0~2021년간 국가채무가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도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총지출 관리노력 강화,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리스크 점검, 재정준칙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여,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본예산	추경				
■ 국가채무	805.2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대비, %)	(39.8)	(43.5)	(46.7)	(50.9)	(54.6)	(58.3)
■ 경상 GDP 성장률	0.6*		4.8	4.0	4.0	4.0

* '20.6.1 발표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table><tr><th>통합재정수입</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td></tr></table>	통합재정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	<table><tr><th>통합재정지출</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td></tr></table>	통합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	=	<table><tr><th>통합재정수지</th></tr></table>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통합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		⋮							
<table><tr><th>보전수입</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기금간)</td></tr></table>	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기금간)		<table><tr><th>보전지출</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기금간)</td></tr></table>	보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기금간)			
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발행수입■ 차입금·차관수입■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내부거래수입 (회계·기금간)									
보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원금상환■ 차입금·차관상환■ 차기이월■ 내부거래지출 (회계·기금간)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인구구조 변화 대응투자 강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의료보장성 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돌봄과 보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그린 뉴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분야 인재양성과 SOC·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보,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안전 투자 지속 확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방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국방전력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재해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80.5 (12.1)	199.9 (10.7)	217.4 (8.8)	230.2 (5.9)	242.7 (5.4)	(7.7)
2. 교육	72.6 (2.8)	71.0 (△2.2)	74.2 (4.4)	75.4 (1.6)	77.9 (3.4)	(1.8)
3. 문화·체육·관광	8.0 (10.6)	8.4 (5.1)	8.8 (4.7)	9.2 (4.0)	9.4 (3.0)	(4.2)
4. 환경	9.0 (21.8)	10.5 (16.7)	11.4 (8.3)	12.1 (6.1)	12.6 (4.0)	(8.7)
5. R&D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6. 산업·중소·에너지	23.7 (26.4)	29.1 (22.9)	32.3 (10.9)	34.2 (5.8)	35.6 (4.0)	(10.7)
7. SOC	23.2 (17.6)	26.0 (11.9)	27.8 (6.8)	28.7 (3.4)	29.3 (2.0)	(6.0)
8. 농림·수산·식품	21.5 (7.4)	22.4 (4.0)	23.0 (2.7)	23.3 (1.3)	23.5 (1.1)	(2.3)
9. 국방	50.2 (7.4)	52.9 (5.5)	56.1 (6.0)	58.6 (4.5)	60.9 (4.0)	(5.0)
10. 외교·통일	5.5 (8.8)	5.7 (4.3)	6.0 (4.0)	6.2 (4.0)	6.5 (3.9)	(4.1)
11. 공공질서·안전	20.8 (3.5)	21.8 (4.4)	22.8 (4.8)	23.7 (4.1)	24.6 (3.4)	(4.2)
12. 일반·지방행정	79.0 (3.2)	86.5 (9.5)	87.6 (1.3)	92.0 (5.0)	94.9 (3.2)	(4.7)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8.2%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58.5 → 2024년 80.1조원) 취약계층 및 일자리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량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 분야

교육 분야의 재량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72.6 → 2024년 77.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3.4%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55.4 → 2024년 63.3조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등의 증가율이 둔화되어 고등 교육부문의 증가폭은 작으나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및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미래 대비 투자와 함께 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기회 보장, 선취업 - 후학습 지원 등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8.0 → 2024년 9.4조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추진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및 서비스 전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한류를 확산시키고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지원할 것이다.

■ R&D 분야

R&D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7.2%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24.2 → 2024년 32.0조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리품목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화 추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N·A 기반 디지털 및 친환경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R&D 및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혁신 인재 양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7%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23.7 → 2024년 35.6조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소상공인, 에너지 분야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무역정책자금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SOC 분야

SOC 분야 재량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23.2 → 2024년 29.3조원) 동 기간 중 SOC의 고속화, 디지털화, 안전 강화 등 질 제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SOC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SOC 시설 관리에 AI, 5G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재해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국가 기간망 구축을 추진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드론, 자율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2.9%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18.3 → 2024년 20.6조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축산과 노지분야까지 스마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종자·반려동물 등 농생명산업과 식품·외식산업 등 유망 분야의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R&D 등의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자금·농지·기술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 인프라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환경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8.8% 수준으로 전망된다.(2020년 8.9 → 2024년 12.4조원) 동 기간 중 그린뉴딜 추진, 수돗물·홍수 등 안전대응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먹는물·기후변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녹색경제의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물관리 전과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AI 홍수예보 등 홍수예보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 기여율이 높은 산업·발전 및 수송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사업 및 폭염·한파 등 취약 지역·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한편, 재활용 시장·산업 활성화 및 처리단계의 공공 안전망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 분야

국방분야 재정지출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및 전력유지비 적정수준 확보를 위해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2020년 50.2 → 2024년 60.9조원)

방위력개선 분야는 감시정찰 및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과 국방 R&D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러·재난 대응역량을 보강하고, 질병·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적극적 지원역량을 구비하는 등 비전통위협 대비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운영분야는 첨단전력의 적정가동률 보장, 실전적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경계력 강화 등을 통해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복지 증진, 인력구조 및 부대 개편을 위한 간부·민간인력 증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외교·통일 분야 재량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5.5 → 2024년 6.5조원) 이는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사조력법 시행('21년)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문화교류 지속 확대 등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량지출은 2020~2024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20.8 → 2024년 24.6조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역점을 둘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하는 등 인권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재소자·출소자 취업역량을 높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수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환경 개선 등에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재해·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해역 해양사고 대응능력과 민간수색구조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대형화재 등 특수재난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3.4 → 2024년 15.1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접경권·서해5도·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중장기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및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서비스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사 정리 및 기념사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통계 및 선거관리 등 행정지원 소요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아동수당 도입(2018),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2019) 등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 분야 투자규모는 연평균 8.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분야(조원)	115.7	123.4	129.5	144.6	161.0	8.6

* 본예산 기준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모든 혜택이 수급자에게만 집중되는 최저생계비 단일기준(All or Nothing)을 폐지하는 대신, 생계(기준 중위 소득의 30%)·의료(40%)·주거(43%)·교육(50%)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다층적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소득이 더 늘어나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0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었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공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신설(2018)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지원하였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2008)뿐 아니라 주택연금(2007), 농지연금(20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은 2019년부터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2021년까지 월 30만원) 또한 장기요양 보험 도입(2008) 및 대상자 확대, 노인 틀니(2012) 및 임플란트 급여화(2014), 치매안심센터 설치(2017),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7) 등을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최근 5년간('16~'20) 일자리 예산은 연평균 14.6%씩 증가하며, 전반적인 고용부진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실업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을 강화하였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개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신규지원 등 직업훈련 내실화도 병행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수급빈곤층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한 가구내 지출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원 등 교육급여의 체감도 개선도 추진한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 대비 투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1·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방향을 기존의 국가주도 성과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미래 대비 투자로 전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역량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재유행 및 확산 예방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확충,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치료여건 조성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확대 등 감염병 대응 필수 인프라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비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치·운영 지원을 포함하여 감염병 분석·조사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관리 기반 조성과 함께 코로나블루 극복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균형있게 관리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을 비롯한 대국민 정신상담을 강화하고, 마음 치료 및 치유 역량을 내실있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

전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사회보험료와 구직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과 청년들까지 고용안전망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될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빅데이터·AI 등 바이오산업 내 ICT 융합을 촉진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주요 분야별 투자 강화로 혁신동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新의료 선도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중심병원, 스마트병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등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의료기술연구동,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한국형 NIBRT 본격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혁신인재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 대응력 강화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속 투자를 통해 취약지역 의료시설·인력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보건소 시설확충을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거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전문인력 연구실습비 지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의료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및 특수분야 의사의 부족 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1,805,430	1,998,959	2,173,892	2,302,492	2,427,011	7.7
○ 기초생활보장	139,659	153,095	167,411	178,003	188,505	7.8
○ 취약계층지원	39,603	45,185	50,331	53,624	56,272	9.2
○ 공적연금	554,491	604,793	660,614	707,450	761,735	8.3
○ 보 훈	57,345	58,383	59,123	59,969	60,841	1.5
○ 주 택	297,314	336,465	366,074	387,673	400,158	7.7
○ 사회복지일반	14,215	14,703	15,614	16,452	17,033	4.6
○ 아동·보육	85,127	85,150	84,754	83,751	83,136	△0.6
○ 노 인	166,323	188,588	205,195	215,665	227,176	8.1
○ 여성·가족·청소년	10,950	11,466	11,993	12,545	13,122	4.6
○ 고 용	222,759	257,092	286,400	303,298	320,889	9.6
○ 노 동	77,133	92,226	100,342	106,262	112,426	9.9
○ 고용노동일반	5,291	5,574	6,301	6,617	6,876	6.8
○ 보건의료	27,694	32,231	34,462	36,471	37,336	7.8
○ 건강보험	101,956	107,988	119,245	128,553	135,122	7.3
○ 식품의약품안전	5,568	6,020	6,033	6,160	6,386	3.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단, 고소득·고재산가 제외) 우선적으로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가 해당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1·2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개편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급여 수준이 제고되어 더 두터운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급여도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 수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하여 어르신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해 월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일자리의 수를 2021년에 80만개까지 확충한다.

■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따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7.31)에서 2021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2020년 대비 급지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추진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마련을 통해 2022년까지 수급자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최저보장수준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약 18만호씩 총 90.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 출산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5.2→6.0만호)와 청년(4.5→5만호)을 중심으로 총 19.0만호(전년대비 0.9만호 증가)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금의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수준을 우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보육체계 개편 등 보육·돌봄 지원 강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반(16시 이후)을 도입하여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한다.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장보육반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3월까지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영유아 양육가구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 및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의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돌봄지원, 근로 및 사회참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첫째, 2021년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에 따른 증가소요를 고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을 증가시켜 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학대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회복·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활동을 위한 비용과 더불어 쉼터 퇴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위기상황 속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017년도에 지정되었던 호남권, 2020년도에 추가 지정된 중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착공을 통해 감염병 전문 치료·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기반을 확충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만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코로나 상황 속 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건강취약계층에게 활동량 측정기 등 지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감염병 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정신건강 위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전담인력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대면·비대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 지원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 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지역밀착형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증진형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 거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알림서비스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 모바일 앱을 활용한 보건소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지역·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특수전문분야(의과학자·역학조사관 등) 연구·실습비를 지원하고 국립공공 의료대학원을 새로이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더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는 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비율인 20%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가계 부담으로 인해 아플 때 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에는 여러 유형의 후보모델 검증에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실직이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국민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021년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과악체계 구축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해 2021년부터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급자가 직업탐색기간 동안 생계걱정 없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도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구직자를 위해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과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20% 이하)들의 구직활동 시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및 일경험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개선한다.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기능을 혁신한다.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복지+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취업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도 개편한다.

개인·기업 일자리 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에게는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연계한다.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청년고용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을 구직·직업훈련·취업 전 단계에서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특례를 두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금과 신규 가입인원을 축소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고용안정 도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2019년 신설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 범위를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2021년 30~299인 기업, 2022년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늘려 육아휴직 등의 활용 부담을 줄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범부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각 부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신기술 분야별·수준별로 향후 인력수요를 분석·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공급이 부족한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구조를 재편,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초·중·고급 수준별 인력양성 트랙을 구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개편·확대하고, 공공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국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러닝팩토리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비대면 훈련 활성화를 위해 민간 훈련기관이 활용하는 LMS 임대·분양,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및 온라인 훈련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강화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장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장년층을 위하여 기업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업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중장년층 비자발적 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동료지원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신설하고, 맞춤형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장애인에 대한 훈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생계급여 수급자수(만 명)	127	⇒	153+α
▪ 기초연금 수급자수(만 명)	568.8	⇒	696.2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개)	-	⇒	3
▪ 지역간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배)	1.27 (’18년)	⇒	1.23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빈곤 사각지대 추가 발생에 대응 필요
-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주요내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2년까지 폐지

- 우선적으로 '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기대효과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22년까지 약 18만 가구(26.2만명) 신규 지원 예상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어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
-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 (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4대 공적연금 >

- (국민연금) 국가지원금 102억원
- (공무원연금) 국가·지자체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및 보전금 등 4.3조원
- (사학연금) 연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0.9조원
- (군인연금) 연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및 보전금 등 2.8조원

< 기타 보험 >

- (고용보험) 모성보호,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지원 0.8조원
- (산재보험) 산재보험 지원 0.02조원
-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9.5조원*

*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3% 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 1.5조원*

*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0%(법정 국고지원비율) 수준

(단위 : 조원)

'21년	공적 연금				기타 보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
수입	133.8	24.1	13.0	3.6	22.4	18.2	77.4	9.0
자체	69.7	16.9	5.7	0.7	14.5	9.5	66.5	7.4
정부	0.01	4.3	0.9	2.8	0.8	0.02	9.5	1.5
기타	64.0	2.9	6.4	0.05	7.1	8.7	1.4	0.1
지출	133.8	24.1	13.0	3.6	22.4	18.2	77.6	8.6
사업비	29.8	21.1	5.4	3.5	18.7	8.1	75.6	8.3
기타	104.0	3.0	7.6	0.06	3.7	10.1	2.0	0.3

2. 교육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차별없는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 41.2조원에서 2020년 55.4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지원, 고교 무상교육 시행,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소통 및 협동능력을 기르는 융합 교육과정 운영과 예술·체육 교육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중심으로 교과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였다.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지원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충해 왔으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14년 1학년 → '17년 1~4학년)하였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하였고, 2019년부터 기존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전문대학도 전문대학혁신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학·

전문대학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행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또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기반 확충 및 석박사급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충해 왔다.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및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청년고용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고교 졸업 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과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년 3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8년 5월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을 신설하여, 고졸 회사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대학 진학을 통해 자아 실현 및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문해 학습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여 소득 및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장애인들에게도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조원)	52.9	53.2	57.4	64.2	70.6	7.5%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온·오프라인 융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강의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실을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 현직교원 및 예비교원의 온라인 교육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전국 모든 대학이 필수적인 원격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 공동 온라인 강의 제작 및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라 저소득·장애학생의 학습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고 학습 수준별 또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의 실제 실력에 맞게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초·중등 교육단계 미래인재 양성 투자

2022년으로 예정된 교육과정 전면개정에 대비하여 사전 정책연구 및 심의회·세미나·공청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정보·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알지오메스 개발 확산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창의력·상상력 구현을 위한 융합형 공간을 조성하는 등 무한상상실 구축·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교육비 부담 경감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을 고교 단계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설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매학기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1학기 2.2% → 2.0%, 2학기 1.85%)하였고, 2021년에는 1.7%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저소득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및 기업현장 경험 지원 등을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자 수를 확대한다. 기존 우수장학금인 인문 100년·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인재(우수)장학금’을 2020년에 신설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각각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전 아젠다를 기획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형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으로 20주년을 맞은 BK21(BrainKorea 21)사업의 3단계 사업 종료('20년 상반기)에 따라, 2020년부터는 4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육성 규모를 확대하고, 석·박사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대학원이 연구 역량을 집적화하고 대학원간·대학간 융합학제 개편 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한다.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물을 일반 대학에 공유하고, 신산업 분야별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공유대학 모델인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전공자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으로도 기초·심화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모든 분야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한 교육환경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LED등 교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비하여 교과교실제에 맞는 교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학교내 공간혁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노후 기기들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건강 제고를 기대한다.

신산업, 융합,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에 고가·첨단 기자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열악한 동물실험 여건 개선 및 국제수준의 시설 기준 확보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고령화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적응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한국형온라인공개 강좌시스템(K-MOOC)에 AI 등 신규강좌를 개발하고, 4차 산업분야 대표 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언제든 양질의 대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여건에 관계없이 평생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질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인 문해학습자들의 기초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72,634	71,026	74,181	75,374	77,920	1.8
○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3	58,465	61,472	62,341	65,305	2.0
○ 고등교육	11,014	11,319	11,445	11,738	11,343	0.7
○ 평생·직업교육	1,072	1,103	1,121	1,146	1,115	1.0
○ 교육 일반	137	138	143	150	157	3.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대학의 역량 제고 유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국립대학의 기초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지역대학을 육성하는데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형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역혁신형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학연협력

그 간 대학 내 산학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산업과 대학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온 LINC+사업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융합전공의 개발·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개별 대학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며, 일반에 공개하여 전국민이 혁신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LINC+ 사업은 개별 대학 단위,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간 교류 및 전공간 융합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영재키움 프로젝트)을 확대한다.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진로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공계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프로젝트’도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영유아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속 지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약 109만 명의 만 3~5세 아동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투자효과가 높은 유아교육 단계에서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2020년과 같이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도 국고로 지속 지원된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전문대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기술인의 육성과 취업시장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계열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참여 인원이 최근 감소하면서 고졸취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선 학교에서 현장실습 여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취업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체와 학교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내 실습전담 직원(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실습비용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하는 시기에는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생애 첫 출발을 응원하고 생활 기반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학교를 통해 취업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졸맞춤형 취업지원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대의 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신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숙련 실무중심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신산업분야별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을 선발하여 교과 과정 개발 및 실습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공간 혁신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동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한 학교·교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한상상실·소프트웨어 공간 혁신 모델학교 등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설계를 지원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능 정보·융합교육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비하여 교과교실제에 맞는 교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내 공간혁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황 및 수요에 맞게 교실공간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통한 안전보강, LED등으로의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달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 노후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대학의 경우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고위험 물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 연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위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8	⇒	40
▪ 고교무상교육 대상학생(만명)	86	⇒	124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천명, 누적)	38	⇒	56
▪ K-MOOC 강좌 수(개, 누적)	885	⇒	1,745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동, 누적)	-	⇒	2,302

■ 추진배경

-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필요

※ 고교 진학률 99.7%('19, KEDI)로 이미 고교 교육 보편화 단계임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격차 해소 필요

*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 연간 약 160만원

■ 주요사업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1년 완성

- ('19.2학기) 3학년 → ('20) 2, 3학년 → ('21~) 전 학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 증대('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월 15.5시간 근로소득)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

※ 1단계 BK21사업('99~'05) → 2단계 BK21사업('06~'12) → BK21 플러스 사업('13.9.~'20.8.)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9.~'27.8.)

■ 주요사업내용

- (사업유형)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지원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방향	핵심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혁신 성장을 선도할 연구인력 배출 및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신청 단위(안)	대학원의 단일 학과(부)	융복합 학문 성격을 지닌 대학원 및 대학원 단일학과,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 (지원내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및 교육연구단(팀) 운영비 지원

* 석사생 월 70만원, 박사생 월 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 이상 지원

- (대학원 혁신지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학 본부 중심의 방향성 수립 및 체제 구축 등 제도혁신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혁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및 사회·산업 문제 해결형 융·복합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
-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 석·박사 과정생 지원 확대 및 대학원생·신진 연구인력 지원 기준 인상 등을 통해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
- (연구 질적 수준 제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 등으로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 및 도전적·장기적 연구 유도
-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통한 대학 본부 중심 대학원 제도 혁신 지원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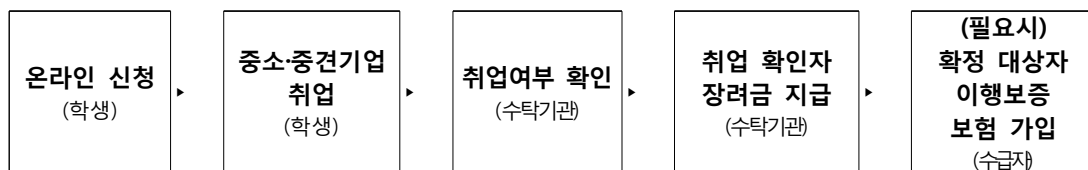
-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따라 취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필요

■ 주요사업내용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참여 고3학생 대상 일시금 4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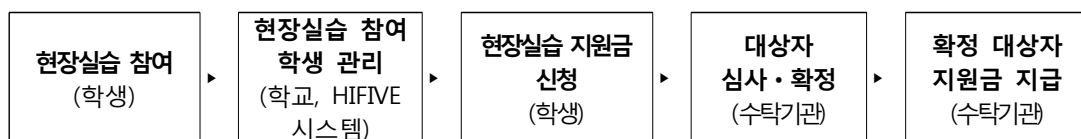
※ '21학년도 3학년 취업생부터 단가 인상 400백만원 → 500백만원(정부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지급 절차(안) >



-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참여 직업계고 3학년 학생 대상 월 60만원씩 평균 2개월 지원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 지원

< 현장 실습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안) >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직업교육의 완성 단계인 현장실습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후 고졸 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여 고졸 취업 확대
-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고졸 기술기능 인력의 적재적소 취업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와 산업 융합 등 투자 지속 확대

문화재정 투자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문화 참여 확대 및 격차 해소, 문화 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을 중심으로,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15~'19년간 문화분야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 분야(조원)	6.1	6.6	6.9	6.5	7.2	4.2%

■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불균형 해소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 시설에 대한 이용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 2017년 7월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연간 300만 명이상이 공연장과 전시관 및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를 접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거점인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생활권 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 ('15년) 21,244개 → ('19년) 30,726개

*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15년) 2,519개소 → ('19년) 2,825개소

이와 동시에 문화향유권의 보편적 확대와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다.

또한 소외계층 및 지역을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과 지역 문화예술 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이 공연·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확대를 통해 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축소하였으며, 유아·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 하였다.

- * 문화누리카드 발급매수 : ('15년) 1,378천매 → ('19년) 1,629천매
- * 소외지역 문화순회공연 : ('15년) 1,969회 → ('19년) 8,337회

■ 기초예술·예술인 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

지난 5년간 기초예술 활성화 및 국민 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19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로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인 복지사업도 확대 하였다. 예술인의 기업·기관 파견을 지원('19년 1,001명, 207개 기업) 하였으며,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종합시스템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 예술창작준비금 수혜자 수 : ('15년) 3,523명 → ('19년) 5,500명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19년 신규) : ('19년) 1,497명

■ 게임·영화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핵심 콘텐츠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창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한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구축(2개소)하고,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15개소)도 지속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신축(‘20년 3개소 완공 예정)을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와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콘텐츠 분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완성보증 및 펀드사업을 추진하여, 펀드 투자로는 약 2.3조원, 완성보증을 통한 융자는 약 6,47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상품설계를 통해 이차보전 상품을 출시하여, 콘텐츠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 (‘15년) 541억원 → (‘19년) 630억원
- * 융자 보증 규모 : (‘15년) 50억원 → (‘19년) 200억원

■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균형성장 도모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대학운동부 지원 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선수촌 시설 확충, 체육단체 통합,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등 전문체육 육성에도 힘써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이 상호 보완 하에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 (‘15년) 29개소 → (‘19년) 98개소
- * 국민체육센터 확충 : (‘15년) 214개소 → (‘19년) 404개소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5년) 2,480명 → (‘19년) 2,800명

■ 국내관광 활성화 등 내수창출 기여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주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광역권 관광개발, 창업지원 및 우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상품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국제회의업(MICE), 의료·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방한 관광시장 고품격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해외시장별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 테마별 관광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였다.

*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 ('18년) 1,535만명 → ('19년) 1,750만명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 및 비대면 산업 육성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문화·관광·체육 관련 분야 수요가 급감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그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활동이 비대면·온라인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요활성화, 금융지원 등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종사자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판 뉴딜('20.7월) 등 관련 대책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신한류 진흥 확산

그간 한류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확산되어 왔고,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나, 대중문화 편중, 반한 정서 등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째, 한류 콘텐츠를 전통문화, 예술 등 전 문화예술 영역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둘째, 한류로 인해 소비재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까지도 연계를 강화하며, 관련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 교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제고와 예술인 복지 강화

국민의 문화 접근성 개선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2021년까지 1인당 연 10만원으로 상향하고(20년 1인당 연 9만원),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용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되, 2021년부터 적용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 거점도시(광역 1개, 기초 4개)에 대해 브랜드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 관광 상품·아이디어를 지닌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성장-도약-해외진출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관광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K-pop, K드라마 등 한류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의 체계적 홍보·활용 등 한류를 활용한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생활체육 저변 확산과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수영,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창업 기업 보육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분야	80,181	84,241	88,205	91,767	94,486	4.2
○ 문화예술	35,371	37,068	39,709	41,584	42,927	5.0
○ 관광	13,491	14,859	15,163	15,528	15,849	4.1
○ 체육	16,961	17,491	18,040	18,556	18,974	2.8
○ 문화 및 관광 일반	3,447	3,582	3,756	3,947	4,150	4.8
○ 문화재	10,911	11,241	11,538	12,153	12,586	3.7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향유 인프라 확충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3)를 계기로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 미래 시장·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일반국민의 실감형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게임·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실감형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감형 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및 서비스 전환 지원

코로나19 시대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연·전시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생중계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창작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초중등 온라인 교육과정에 게임콘텐츠를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문화예술관련 전문분야 교육을 위한 온라인 과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ICT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국민관광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속하고, 청년·시니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국민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보급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3	⇒	84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29.1	⇒	162.3
▪ 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이상, %)	68.0	⇒	70.0
▪ 국내관광 총량(억 일(日))	4.4	⇒	6.7

■ 추진배경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
- 現 지원금 규모로는 공연, 관광 등 향유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이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제한

■ 주요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6세 이상)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20년) 연 9만 원 ⇨ **('21년) 연 10만 원**
- 이용분야: 문화예술(공연·전시·영화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국내 여행(숙박, 관광지,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프로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신청
* '19년부터 기존 수혜자는 ARS 전화로도 재충전 가능

■ 기대효과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세계최초 5G 상용화('19.4월)로 향후 고품질 실감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성장잠재력이 증가한 실감콘텐츠 분야에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한 산업육성 필요

■ 주요사업내용

- 국내외 대표 실감콘텐츠 체험거점 조성
 - 박물관·문화유적·관광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일대에 다수 인원 동시 체험이 가능한 실감콘텐츠 전시·체험 공간 조성
 -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향유형' 실감콘텐츠 개발
 - 한류 킬러콘텐츠와 연계, 해외 실감콘텐츠 복합 체험공간 조성
- 문화·체육·관광 분야 우수 실감콘텐츠 제작·유통지원
- 실감콘텐츠 산업육성 기반 조성
 - 실감콘텐츠 유망분야(T-E-S-T*) 중심,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
 - * 관광(Tourism),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스포츠(Sports), 교육훈련(Training)
 -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뉴콘텐츠센터' 운영 및 입주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실감콘텐츠 분야의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대

■ 추진배경

- 관광생태계에 관광 활동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각 행위자들의 행태변화와 혁신 유도함으로써 국내 관광의 선진화 도모

■ 주요사업내용

- 관광분야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수요자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서비스’ 적시 제공
 - (수집) 관광 활동(국내외 여행자의 관광지 이동-체류-소비 등) 및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수집
 - (분석) 데이터 수요자별 요구 기반 맞춤형 관광 데이터 분석 및 예측
 - (제공) 데이터 수요자별(관광객, 민간업계, 공공분야)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서비스’ 적시 제공
 - * (관광객) 개인 맞춤형 관광지 추천 및 혼잡도 등 정보 제공(‘여행예보’)
 - * (민간업계) 관광기업·예비벤처에 업계 요구 기반 관광객 행태 정보 등 제공으로 관광마케팅 고도화 및 신규 창업 지원
 - * (공공분야) 지자체, 정책 유관기관 등에 관광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지역별 관광 경쟁력 진단 분석 등 제공

■ 기대효과

- 관광객 여행 만족도 제고 및 여행 수요 분산을 통한 안전여행 확산
- 데이터 기반 적시·과학적 관광정책 수립 및 마케팅 활성화 통한 관광산업,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4. R&D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대외 여건 및 기술 급변에 대응한 R&D 투자 확대

우리나라 R&D 분야는 199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해 왔으나, 증가율은 2011년 이후 10% 이하로 2016~2018년에는 2% 미만 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정보 통신 기술발전의 가속화, 세계 경제 저성장 및 보호무역주의, 2019년 일본의 對한국 수출제한 조치 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이 급부상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 확보, 혁신성장 동력 마련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 제고 등을 위해 정부 R&D는 2019년 4.4%에서 2020년 18.0%까지 큰 폭으로 증가 하게 되었다.

<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조원)	18.9	19.1	19.5	19.7	20.5	2.1%

* 본예산 기준

■ 혁신성장 분야 집중 투자

기존 주력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는 플랫폼(데이터·AI, 수소, 혁신인재 양성 분야) 경제 구현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8대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는 혁신성장 가속화 및 확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D.N.A(Data·AI·5G) 플랫폼 분야 및 3대 핵심산업(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을 촉진하였다.

■ 국정과제 지속적 이행

혁신성장 분야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자와 기업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다. 우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 2.52조원까지 2배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투자 규모는 2조원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R&D 투자 규모도 2017년 1.21조원에서 5년간 2배 수준 확대를 목표로 2020년 2.11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도 2017년 1.17조원에서 5년간 2배 확대 목표로 2020년 2.31조원까지 투자규모가 확대되었다.

■ R&D 성과 제고 및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 R&D 투자 규모 및 성과는 양적인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에 반해 지출 효율화 및 질적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R&D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R&R(Role and Responsibility)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수행하였다. 이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 예산지원 제도인 PBS(Project Base System, '96~)의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어 수정, 보완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서, 기관이 스스로 국가·사회를 위한 출연(연)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경제 위기 극복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세의 지속,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 세계 무역 마찰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형태 변화, 공급망 변화 등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 세계 산업경쟁력 재편 등 새로운 도전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난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R&D 투자는 연구수행주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반한 국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전략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여건에 신속 대응하여 혁신성장 중점 투자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R&D의 창의·도전성 강화, 혁신인재양성, 산학연 및 글로벌 융합연구 확대,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도록 R&D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2002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류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발생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진단,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D.N.A.(데이터·5G·AI) 인프라 구축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며, 교육·헬스케어·물류·고용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할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친환경 스마트 경제로의 구조전환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생태복원 기술과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의 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R&D 혁신성장 분야 성과 가시화

혁신성장 가속화 및 확산을 선도할 3대 핵심산업(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여 제품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핵심품목 조기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미래 신소재, AI·에너지·바이오 등 첨단 유망 소재·부품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규제 특례 적용·실증·사업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구,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미래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및 우수인력 성장 강화를 위하여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내실화하고,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우선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AI·SW, BIG3 등 산업 분야별 특화된 고급 핵심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수준 향상을 위한 혁신인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R&D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R&D	242,195	272,003	290,800	306,547	319,635	7.2
○ 과학기술 부문	72,225	78,533	83,730	90,339	95,093	7.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58,230	66,966	75,991	83,952	92,988	12.4
○ 교육 부문	23,105	24,471	25,148	25,273	24,780	1.8
○ 사회복지·보건· 환경	10,457	14,119	15,667	15,494	15,328	10.0
○ SOC 부문	8,883	10,130	10,901	11,337	11,946	7.8
○ 기타	69,295	77,782	79,363	80,152	79,499	3.5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과 제조업 간의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도 제고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성능검증·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혁신성장 가속화 및 확산을 위한 3대 핵심산업 중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차·자율차용 핵심부품 개발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전주기 대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AI 기반 서비스에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유망신산업 분야 칩 설계·소자 개발 지원 및 팹리스 기업 양성을 지원하고, AI 반도체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투자 강화

D·N·A 기반 디지털 및 친환경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강화한다.

D·N·A(데이터·5G·AI) 기반 인프라 구축, 교육·헬스케어·물류 등 비대면 신산업, 정보보안, SOC 디지털화 등 D·N·A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유망 신기술 분야의 R&D 투자 강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지원한다. 아울러, 녹색산업 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그린

뉴딜의 조기성과 도출을 지원한다. 도시 공간 및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고효율 건축기술,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술, 디지털 트윈 활용 스마트 물 관리 연구를 강화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풍력·태양열·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과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 순환, 바이오 소재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유망 녹색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한 국가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진단·예방 및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등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차세대 핵심 플랫폼 기술 및 예측·역할모델 개발 등에 투자하고, 바이러스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의·약학 인재 등을 활용하여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에 이르는 신약개발 쏠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품목 중심으로 핵심 기술 국산화 R&D 및 임상실증 투자 확대 등 의료기기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혁신인재양성 확대

산업·연구 현장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혁신성장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SW 등 ICT 분야의 최고급 인재 양성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등 각 산업 분야별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내실화

혁신성장 분야의 미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측가능성 및 연구자 수혜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신규과제를 지원하고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심이 되는 중견 연구자 및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신진 연구자의 성장 단계 및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공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불확실하고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창의·도전적 R&D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산업적 난제해결 연구에 집중 지원한다.

■ 공공연구기관 임무·역할에 따른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임무·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전략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공립(연)과 전문(연)에 대해서는 고유기능 강화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지원한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기관의 임무·역할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및 인력 규모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한다.

■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효율화

R&D 사업에 대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 체계 및 집행 현황 점검을 통해 기획평가관리비 산정 기준과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그동안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던 기획평가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량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비목(360-06)을 신설하였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역량과 사업 특성(과제수, 규모, 참여인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기획평가관리비를 반영하는 시스템(산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일몰제도 및 일몰관리혁신

정부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목표가 불확실한 장기 계속사업의 관행적 지원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지출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후속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연구 공백이 생기거나, 일부 내용만 변경한 신규사업을 비예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의 추진이 필요한 일몰사업은 주기적 점검(5년, 3+2년 체제)을 통해 일몰연장으로 전환하는 일몰관리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일몰관리혁신 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와 추가 연장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4차 산업혁명 R&D(조원)	2.1	⇒	2.5
▪ 중소기업 전용 R&D(조원)	2.3	⇒	2.4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지원(조원)	2.0	⇒	2.8

■ 추진배경

- 부진한 출연(연)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재정립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할 필요

* 과도한 연구개발 성공률, 단기성과 중심의 소규모 과제 수행 등

■ 주요내용

- (단기) R&R 부합사업 위주로 재원·인력을 반영하고 구조조정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사업구조 개편) 출연금 기본연구(주요사업비)의 R&R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미부합 연구는 구조조정, 부합연구는 투자 확대
 - (인센티브 부여) R&R 이행을 위한 혁신 우수기관을 선별하여, 주요사업비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인력구조 개편) R&R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자 조정 및 부서별 인력재배치 등 인력개편을 유도
- (중장기) 우수 사례 공유, R&R 이행노력의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추진동력 지속 확보

■ 기대효과

-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립한 출연(연) R&R의 효과적 안착
- '연구자'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현장' 중심으로 출연(연) 정책 변환

■ 추진배경

- 장기·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를 위해 일정기간 후 종료*되도록 한 일몰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대두

* 일몰연도 예산의 신규과제 미반영 및 계속과제 종료 시 사업 종료

- 중장기 대형 후속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연구 공백 발생, 기존과 유사한 후속사업을 예타 면제 범위에서 다수 추진 등

■ 주요사업내용 :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일몰관리 혁신

- '20년도 사업에 대해 프로그램형 사업·국가 현안해결형 사업 등 분류하여 일몰관리 혁신대상 선정

- 부처 자체점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검토를 거쳐 7개 부처·35개 사업 선정('19.6.28., 과기자문회의)

- 신규과제 등 적정소요 예산 반영

- 5년 단위(3+2년 체계 : 사전점검+확정)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검토 및 요건 미달시 대상에서 제외

- 일몰관리혁신대상에서 제외 시, 일몰관리 체제로 재전환

- '21년도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6개 사업 추가 (비대면 산업·감염병 대응·소부장·일자리 사업 등)

■ 기대효과

- 일몰관리혁신대상 사업의 일몰연장을 통해 후속사업 예타 준비로 인한 연구 공백 방지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2015~2017년에는 재정투자가 감소했으나, 2018년부터는 주력산업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원)	16.4	16.3	16.0	16.3	18.8	3.4

* 본예산 기준

■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기틀 마련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대일무역 적자 등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100대 핵심 품목 중 불산액, 불화수소가스, EUV 레지스터를 국산화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통해 국내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수급을 조기 안정화하고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주력산업 재도약 및 미래 신산업 창출 지원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을 수립·이행했고, 스마트 산단을 4개소(창원, 안산, 구미, 인천) 지정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등 7개 지역 상생·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의 비전과 지원방안을 제시했고,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3년 연속 무역 1조불,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우리나라 수출은 新남방·新북방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며,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세계 7번째)를 돌파하였다. 또한 「유턴기업 종합지원제도(‘18.11월)」을 마련하며,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유치 및 대기업 유턴 사례를 최초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제2벤처붐 가시화

최근 5년간 벤처·창업지원 예산이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되면서 벤처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누적출자액도 4.5조원을 넘어섰다.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TIPS 등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에는 벤처투자액이 4조원을 돌파하고 유니콘 기업 숫자가 세계 6위인 11개를 달성하며 신설법인 수도 10.9만개에 이르는 등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촉진시키고,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등 기존상권 활력을 제고하였다.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석탄 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발전 부문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시내버스 시범운행 등 수소경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에너지 투자

기후변화로 촉발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관리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수소 경제 전주기 지원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D와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 대상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교체 지원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전선·통신선에 대한 공동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 확산을 가속화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풍력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배후·실증단지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 등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하여 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등 수소 생산-유통-안전 쉼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승용·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전기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원한다.

■ GVC 변화 대응을 위한 수출 및 투자유치 강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충격, GVC 재편 및 新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도약하는 GVC 혁신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추이에 맞추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B2B·B2C 직접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무역거래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GVC 재편에 대응하여 新남방·新북방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K-방역, 뷰티, 의료 등 대한민국의 新강점 분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한편 WTO 분쟁 적극 대응, FTA 체결 및 이행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국내기업 유턴 및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해외교육·연구기관의 지속적 유치, 글로벌 연구기관과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 기지화도 중점 추진한다.

■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스마트 산단 등 주력산업 혁신 지원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핵심 기지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산업지능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인 세계 4대 제조강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중심으로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 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력 제조업 혁신을 위해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산단별 특화시설을 구축하고, 5개 산단대개조 지역 모두에 대해 산단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지역기업 사업화·R&D 지원 등 공유 인프라를 집중 지원한다. 인프라 지원 위주였던 경제자유구역에 AI, 수소 중심 경제자유구역을 2개소 추가 지정·지원하고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2.0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한다.

그리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R&D, 사업화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 제조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제조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적 측면에서는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목표 5,500개 보다 확대된 6,000개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질적측면에서는 일정 레벨(Lv3) 이상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공장 보급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도 추진한다. 동일한 가치사슬내 기업군을 대상으로 통합·연계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형 방식을 도입하여, 스마트공장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이 운영상 애로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솔루션 업그레이드, 부품교체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비용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기술 보급사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 기술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5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조로봇 설비 구축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간다. 로봇을 구축한 기업들이 불량률 저하, 제조원가 절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스마트공장과 연계하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최근 되살아난 제2 벤처붐의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벤처·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벤처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대해 재정에서 지속 출자하고, 회수재원을 재투자하여 유망분야에는 더 많은 자금이, 소외된 분야에는 적정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화 지원의 경우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간다. 비대면·디지털·그린, 소재·부품·장비 등 유망분야 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지속 확대하고, TIPS 전후 단계의 전주기적 지원도 병행하여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유망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주요 거점지역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앵커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혁신창업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0%를 상회하나 규모가 영세하고 변화 적응력이 다소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혁신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을 2025년까지 11만개 보급하고, 대형 유통사의 골목상권 진출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슈퍼의 무인점포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도 별도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유통환경 대응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구축 및 커머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구독경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O2O 융합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카드 매출, POS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AI 상권분석시스템 개발, 비과밀 업종 창업을 위한 신산업창업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해 디지털 매니저 파견, 테마형 상권 활성화 등 HW/SW를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용 제로페이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154	291,435	323,293	342,051	355,862	10.7
○ 무역및투자유치	10,182	11,996	16,639	16,322	15,224	10.6
○ 에너지및자원개발	38,751	46,104	58,123	56,401	56,425	9.9
○ 산업혁신지원	47,325	54,894	58,930	63,862	66,959	9.1
○ 창업및벤처	44,011	49,174	52,496	58,577	64,112	9.9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84,448	118,677	125,760	133,740	141,956	13.9
○ 산업·중소기업일반	6,575	6,767	8,067	9,880	7,922	4.8
○ 지식재산일반	3,223	3,457	3,278	3,269	3,264	0.3
○ 산업금융지원	2,640	365	-	-	-	△100.0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및 용자 예산을 확대하여, 주택·건물·학교·농촌·산단 등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은 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국내 에너지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사업을 도입한다.

■ 스마트 산단 확대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을 2020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각 스마트 산단에는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제품생산 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 데모공장 등을 산단별 특성에 맞게 메뉴판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과감한 투자 촉진 생태계 조성

세계 각국간 리쇼어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우리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여 첨단산업에 한해서는 지급 대상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 의지를 적극 천명하고, 첨단 외국인투자 기업 및 R&D 센터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공고화

불확실한 경기 변동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처하지 않도록 융자, 보증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에 앞서 기업에 대한 재무진단, 기술평가 등을 강화하여 실제로 꼭 필요한 기업들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측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경영애로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도입·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스마트·비대면화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클러스터 방식의 신설,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로봇도입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비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의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일하는 방식, 서비스 프로세스 고도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관련 ICT 솔루션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비대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격근무 환경 구축에 사용가능한 오픈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외 온라인전시회, 자사몰 구축 등 비대면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R&D 개편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첫째로 단기소액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R&D 성장 단계별로 Scale-Up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로, 단순 뿌려주기식 R&D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추어 ‘투자형’, ‘규제 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 다양한 방식의 R&D 투자를 시행한다. 셋째로, 산·학·연 협력 R&D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할 수 있도록 Tech Bridge R&D도 신설한다. 아울러 R&D 선정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 나간다.

■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서빙로봇,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등 5G 기반 新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하여 소상공인 경영효율화를 지원한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공방과 유해 제조환경을 개선하는 클린작업장을 2025년까지 각 1만개 보급함으로써 소공인 작업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점포수가 감소하고 있는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중소슈퍼 스마트화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중소슈퍼가 무인점포 수준의 스마트화를 구비하고 재고관리, 유통, 판매 등 소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및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개방형 혁신을 위한 해외 거점 마련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가 개선되면서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창업이 10만개에 육박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외거점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 KOTRA 무역관 등은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기술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이 요구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현지의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같은 혁신주체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개방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글로벌 교류의 장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확대할 계획이다.

■ 유통혁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누구나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정보 표준DB를 온·오프라인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구축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AI 기반 유통 예측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유통 빅데이터, 콜드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거점별 공용 풀필먼트 센터를 시범구축함으로써, 상품추천 서비스, 맞춤형 제조, 실시간 온라인 재고 조회 등 새로운 유통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 분	'20		'24
▪ 수출액(억불)	5587	⇒	6,288
▪ KOTRA 수출지원사업 수출창출액(억불)	63.0	⇒	68.3
▪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억불)	200	⇒	200
▪ 국가산단 가동율(%)	80.6	⇒	81.8
▪ 피크억제(MW)	96.5	⇒	94.4
▪ 도시가스보급율(%)	84.4	⇒	86.1
▪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조원)	2.3	⇒	2.4
▪ 법인창업수(만개)	12.0	⇒	14.0
▪ GDP대비 벤처투자(%)	0.22	⇒	0.27
▪ 지역별 우수기업 육성(社)	402	⇒	1,000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명)	5,500	⇒	25,000
▪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	88.9	⇒	91.2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등 대규모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독립)

■ 주요 사업 내용

- 유턴기업 투자 보조를 위해 투자액(입지·설비) 및 이전비용을 지원

* 국내 외 육상/해상에서의 선적/배송/하역비용, 운송보험료 등 포함

< 유턴 보조금 주요 내용 >

구 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수도권 - 유턴기업 중 일부업종 非수도권 - 유턴기업 전체
지원내용	입지·설비 투자액+이전비용 등
국비한도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한도액 기준	사업장 기준
지원비율	투금액의 11%~44%
사업주체	지자체, 코트라, 산단공 등

- 첨단업종의 수도권 유턴에도 보조금 지급(유턴법 시행령 개정 中)
- 지원 비율 상향, 국비 지원한도 확대(100억→300억, 비수도권) 등을 통한 지원 수준 강화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확대를 통한 유턴 투자 부담완화 → 양질의 유턴 투자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병행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규모경제를 달성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나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기술력은 높으나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낮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용 용자보증 제도 마련

■ 주요사업내용

- 기후환경기술·사업 등이 창출 가능한 환경적·경제적 가치(온실가스 감축)를 평가*하여 기업 대상 용자 보증 지원(녹색보증)
 - * 기술·제품 사업화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
- 국내재생에너지 기업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대상 지원 예정

- ◇ **(그린테크보증)** 재생에너지 기술의 탄소저감 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자금에 대한 용자를 지원
- ◇ **(그린프로젝트보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발전사업 소요 자금을 先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신용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의 용자 기회 확대
- 시중 금리 및 보증료 보다 낮게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기업 및 발전사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 추진배경

- 「3020 이행계획」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많은 프로젝트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음
 - 주민 수용성확보를 위한 참여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참여 요건 (총사업비의 2~4% 이상)을 고려시, 주민들의 사업 참여는 어려운 상황
- 이에, 주민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지분, 채권 등)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 (금리 1.75%, 20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발전소 주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또는 개인
 - (지원조건) 대상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마을기업의 경우 대상 주민의 50% 이상 참여필요(최소 5인 이상)
 - (대상사업) 시설용량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부담 완화를 통해 주민과 발전사업자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 활성화

■ 추진배경

-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모멘텀을 가속화할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

*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쏠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구축완료 기업 분석결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 등 성과 창출

- 그 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53% 상승

- 생산물량 증가, 새로운 직무 추가 등 고용도 기업당 2.2명 증가

- 아울러, 근로자 처우 개선 및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

- 생산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환경의 안전성 제고(구축기업 산업재해율 평균 22% 감소)

* 산업재해율(%) : ('14년 구축기업) 0.97 → 0.64, ('15년 구축기업) 0.65 → 0.53

■ 추진배경

-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기술인력의 창업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벤처를 육성

- ◇ 국내창업의 주요 재원조달은 여전히 대출·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창업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존재하여 창업 활성화를 저해
* (창업자금조달) 자기자본 82%, 대출·보증 26%, 엔젤투자 0.4%
- ◇ 매년 벤처투자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초기창업자를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규모는 전체 투자시장의 10% 대로 여전히 부족
* ('17년) 벤처투자규모 : 26,617억원, 엔젤투자규모 : 2,814억원

■ 사업내용

- 성공벤처인·선도기업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운영사*)가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1억원 내외의 민간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 엔젤투자회사(재단), 초기전문 VC, 중견기업·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정부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 5억원, 사업화, 마케팅, 엔젤펀드 등 최대 4억원 지원
- 운영사의 멘토링·네트워크 연계 등의 밀착보육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의 성장을 밀착 지원

■ 기대효과

- 투자방식의 자금조달과 운영사의 보육지원을 통해 창업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을 활성화
- 민간투자자에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적극적인 초기기업 투자를 유도
-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선별된 우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질 좋은 창업을 견인

■ 추진배경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본격 추진('99.8.15 경축사, VIP 지시 후속대책)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13.3) 계획에 반영
- 산업부 및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수출바우처* 도입('17.1월~현재)을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 구축 및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공급기업 성장 유도

*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온라인포인트 제도

■ 주요 사업 내용

- 수출성장사다리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지속 강화 기여
- 중기부·산업부·해수부·농림부 등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통합 지원

* 브랜드개발, 홍보광고, 디자인개발 등 총 12개 서비스 카테고리에 등록된 약 6,000여건의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정기업에 1년간의 협약기간 부여

* ('18) 1,129억원, 3,305개사 지원 → ('19) 1,085억원, 3,022개사 지원

■ 주요 특징 및 기대효과

- '17년부터 도입한 수출바우처 제도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참여기업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수의 수행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
-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혁신성장 주체에 대한 바우처 신설을 통해 정책목적성 강화
- '19년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이 47%이며, 전체 지원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0.3%로 전체 수출중소기업 대비 14.4%p 높게 나타나는 등 지원에 따른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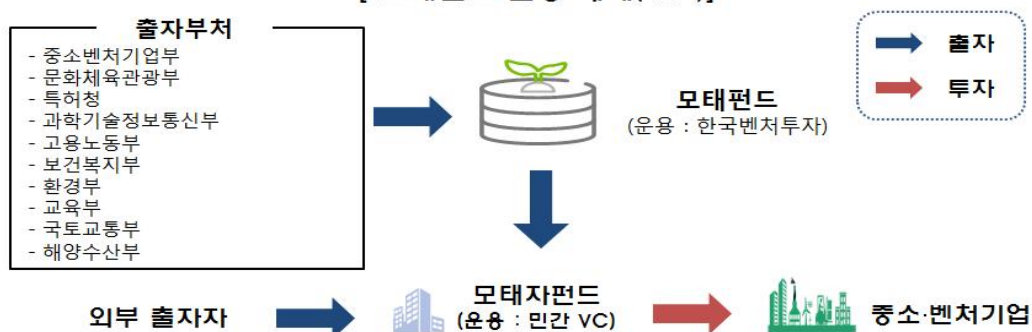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모태펀드 도입 이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벤처펀드에 출자
 - 단년도 예·결산을 하는 기금 특성상 연말 무리한 출자를 하거나, 회수재원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벤처펀드 출자방식을 단년도 회계에서 벗어나, 회수재원을 다시 귀속시켜 재출자하는 모태펀드를 도입 (벤처법 개정, '05년)

■ 주요 사업 내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 '19년 모태펀드 0.9조원 출자, 2.7조원 규모 신규 벤처펀드 조성
 - * 문체부, 과기부 등 10개 부처가 모태펀드 출자에 참여
 - 중기부는 0.8조원을 출자하여 2.1조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조성

[모태펀드 운용 체계('05~)]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여, '19년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 4.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가 유니콘('17. 3개→'19. 11개), 예비유니콘('17. 115개→'19. 235개) 출현을 견인
 - * 유니콘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 예비유니콘 :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 * 국가별 유니콘 수('20.5) : 미 224, 중 120, 영 24, 인도 21, 독 12, **한 11 (세계 6위)**
 - 벤처펀드의 민간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
 - * 신규 벤처펀드 중 민간 자금 비중 : ('17) 60.4% → ('18) 65.4% → ('19) 66.7%
- '14~'18년까지 5년간 투자받은 2,332개사는 '18년말 기준으로 투자 직전년도 대비 3.5만명, 기업당 평균 15.1명 증가

6. SOC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국민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SOC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 이후 SOC에 지속 투자해 온 결과 SOC 스톡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적기완공과 전반적인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한편, 1970~1980년대 집중 건설된 SOC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대, SOC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고 있다.

< SOC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조원)	24.8	23.7	22.1	19.0	19.8	△5.5%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SOC 서비스 질의 획기적 개선

그간 정부는 산업활동 지원 및 국가 교통기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공급 위주의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양적 측면에서는 도로·철도 연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는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SOC 질 제고에 중점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신규 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운영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급격한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IoT, AI,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를 통해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설 사업은 계속사업의 공기를 단축하고, 지역간 빠른 연결과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속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핵심 기간망 구축을 지원하고, 교통 수단·노선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중심의 종합적·선제적 안전투자 확대

1990년대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도입된 이후 SOC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1970~198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 포장도로, 철도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로 개선,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자동차 안전도 강화 및 줄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방법·소방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균형발전 추진

과거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그동안 발전이 늦었던 지역이 SOC 투자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경제적 상황과 주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 1월에 발표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물류·간선기능 확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신규 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노후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노후 공단을 새롭게 재정비하며,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인근의 첨단 산업단지를 공급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쇠퇴하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

SOC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융합된다. 도로, 철도, 공항, 댐,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생활, 물류 등에도 IoT, AI, 5G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 드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교통, 범죄예방, 헬스케어, 쓰레기 처리 등 기존 대도시,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유도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2021년 시행)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기존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신규로 구축한다. 드론은 각종 규제개선은 물론, 도시교통문제의 대안으로 UAM(Urban Air Mobility) 개발에 본격 나서고,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 시장형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도심지 도로 실증,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정밀도로 지도 제작 등을 통해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선박 대형화, 스마트 항만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 항만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 신항만(12개소)을 중심으로 글로벌 항만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항만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 육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항만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방파제 축조, 배수로 정비 및 내진 보강과 더불어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로 암초제거 및 준설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항(29개소) 내 가스·송유관 등 항만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유휴항만 및 매립된 투기장에 대한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객부두, 터미널, 물양장 등 소규모 항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	232,311	260,067	277,846	287,264	293,115	6.0
○ 교통 및 물류	191,825	209,434	226,185	234,442	238,989	5.6
▪ 도로	72,588	76,329	82,830	86,258	87,746	4.9
▪ 철도·도시철도	69,474	78,055	85,865	88,833	90,533	6.8
▪ 해운·항만	18,974	21,076	21,986	22,799	23,233	5.2
▪ 항공·공항	2,691	3,518	3,970	4,153	4,236	12.0
▪ 물류 등 기타	28,097	30,455	31,534	32,399	33,242	4.3
○ 지역개발	40,486	50,633	51,661	52,822	54,126	7.5
▪ 수자원	12,909	15,863	16,637	17,412	18,263	9.1
▪ 지역 및 도시	24,474	30,814	30,976	31,267	31,574	6.6
▪ 산업단지	3,103	3,956	4,048	4,143	4,289	8.4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도로, 철도 등 SOC 기반시설 관리의 디지털화로 안전 강화

IoT, AI, 5G, 센서 등 신기술을 SOC 시설관리에 적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재해의 사전 감지 및 예방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각종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IoT 설치를 확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5년 이상된 노후 교량과 고위험 비탈면에 2025년까지 첨단 센서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철로에는 2022년까지 전기설비에 IoT 설치를 완료하고, 무인 차상검측시스템을 8대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73개 국가하천은 CCTV 설치 등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하공동구에 대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구조물에 대한 3D 통합지도도 제작한다.

시설물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도 구축하여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2022년까지 전국 국도의 모든 터널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전국 국가하천의 3,580개 수문·통문을 강우상황 및 하천수위에 따라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도 본격 구축한다. 특히,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한다.

■ 국가 주요 기간망 구축 및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

국가기간망 완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남부내륙철도, 안성-구리 고속도로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GTX-A, 삼성-동탄 광역철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진접선·별내선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성한다.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 또는 민자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는 GTX-B, GTX-C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위험·병목도로 개선, 혼잡도로 지원 등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교통량 분산을 도모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 BRT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혼잡도로 조기 개선, 광역철도망 구축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출퇴근시 전세버스 추가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해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뉴딜 투자 확대 및 스마트시티 확산 지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12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공기업 주도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신규 도입한 新 재생수단(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적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R&D 등)을 통해 검증된 혁신기술을 기존 도시에 1년 내에 빠르게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챌린지 사업을 신설하여, 매년 15곳(대 5곳, 중소 10곳), 2025년까지 총 75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AI·데이터허브, 사이버보안 플랫폼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종은 교통·교육 등, 부산은 에너지·환경 등 혁신 서비스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주거환경개선(그린리모델링)

노후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에너지저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과 노후 영구임대 19만호, 매입 임대 3.5만호에 대해 에너지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환기 성능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시킬 전망이다. 이를 통해 38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절감설비·친환경 자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의 리모델링 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삶의 질 개선·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물류체계 조성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등 생활물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AI·빅데이터, 배송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술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2021년 「스마트 물류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첨단 시설·장비투자비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상품이 출시된다. IoT, AI 등을 활용하여 다품종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 250개소를 전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공공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중소 물류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물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스타트업 등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20		'24
▪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km)	4천	⇒	14천
▪ 철도 안전사고 (열차운행 1억km당 건수)	5.0	⇒	3.6
▪ 도시재생사업 (개소)	284	⇒	50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재정지원 기준)	-	⇒	2,170
▪ 수소도시 기반구축 (지자체수)	3	⇒	6

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①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 *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및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 ②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 지역특화산업육성+,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②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① 산단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 효율화, 출·퇴근 시간 단축
 - *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 ②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및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
 - *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③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①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 강호축 구축 본격화
 - *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 ② 충청·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 수도권·강원 간선 도로망 확충
 - *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 ③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 * 평택~오송 2복선화

④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①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 ②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도봉산 포천선,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 등

■ 추진배경

- 우리는 파리기후협약(15년)을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설정, 특히 감축 목표가 높은 건물* 부문 집중 관리 필요

* 부문별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물 32.7%, 수송 29.3%, 산업 20.5% 등

-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에너지저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전체 건축물 대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중: 약 70%

■ 추진목표

-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의 목표를 신축건물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필수공사 항목으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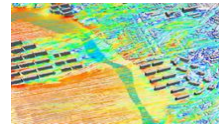
- ① (에너지) 에너지 절감을 최소 30% 달성
- ② (생활환경) 환기시스템 설치로 미세먼지 75% 이상 저감
- ③ (IT) BEMS, 태양광 등 신기술·신재생 필수항목으로 반영
- ④ (미관) 내부 및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적정 설계비 반영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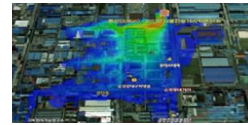
- (총괄기획가) 시·도별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설계자 선정부터 사업 준공까지 총괄 관리할 17개 시·도 총괄기획가를 선정
- (지역협력 플랫폼) 대학·연구소 등 지역의 건축·에너지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로서 시·도별 플랫폼 구축
- (홍보계획) 초기에는 용어 및 개념·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집중, 추후 우수사례·노하우 제공을 통해 성과홍보 및 민간 확산 도모

◇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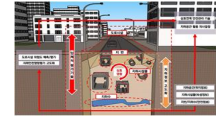
<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



< 바람길 분석 >



< 오염사고 확산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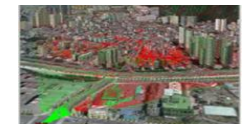
< 지하시설물 관리 >



< 대피경로제시 >



< 교통 시뮬레이션 >



< 건물 가시권 분석 >

- ① (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25cm→12cm) 작성

* 지표면의 표고(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

- ② (정밀도로지도)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국토, 4차로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 구축

*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정확도 : 25cm) 전자지도

- ③ (지하공간)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 구축

* 지하공간통합지도 :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열수송, 지하공동구, 지반정보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반영한 3차원 지도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농업 경쟁력 및 체질 강화

최근 5년간(2015~2019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는 연평균 0.8% 증가하였다. FTA 등 시장 개방 확대, 농업경영비 상승,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 부문 축소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 및 체질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지규모화 및 정비,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에 집중 투자하였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 분야(조원)	19.3	19.4	19.6	19.7	20.0	0.8

* 본예산 기준

■ 재해예방·가축전염병·식품위생 등 안전·위생 투자 확대

가뭄·폭염·태풍 발생 등 재해피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식품위생 파동 등으로 재해안전대비,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식품 복지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면서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과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둔 먹거리 복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가축전염병 관리 및 HACCP 기준 강화 등 재해대비와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하여왔다.

■ 식품업 성장기반 마련

식품업 부문은 식품기술개발,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소식품기업 지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우수인력을 식품분야로 유입하기 위하여 농식품벤처 창업센터, 창업보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식품업의 시장 외연을 넓히기 위하여 식품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식진흥과 음식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투자하였다.

■ 수산·어촌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수산·어촌 부문은 첨단 양식 산업화, 수산 자원 회복 및 관리, 수산 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수출 지원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어촌 정착지원, 귀어귀촌 활성화, 특화어항 개발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FTA 피해대책 시행 및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예방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숲을 찾는 국민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업기반시설 디지털화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 논을 밭작물 재배단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농지조성, 시설장비,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20년 개편한 농업 공익직불제의 안착을 도모한다. 또한,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 확충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쌀가공품 개발도 지원한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경영위기로부터 안전망을 마련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안전보건 센터 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도 지속한다.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은 수문 관리 자동화, 제방 붕괴 사전계측기, 수질측정 자동화 등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 중심으로 투자한다.

■ 농산물 수급 안정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관측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소가격안정제와 의무자조금 단체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조직화, 농산물 직거래 매입자금 지원, 지역 맞춤형 푸드플랜 수립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체험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한다.

축산환경 및 가축방역 체계 개선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축산악취 등 축산분야 환경 부담 저감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축사 사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사전 예방체계와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도 제도화한다. 평상시에 축산 농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GPS등록을 확대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료채취 강화, 방역인력 확충으로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해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살처분보상금, 구제역 백신 개발 등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정착 및 어업인 경영안정

어가소득 보장 및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을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확대 지원하고, 태풍·가뭄·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 벨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스마트농업분야 청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기존 시설원예 중심에서 벗어나 축산과 노지농업 분야 등에도 스마트화를 확산한다. 시설조성과 함께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도 확산하여 스마트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외식, 종자·미생물·곤충, 반려동물 등 농생명산업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여 농식품 유망분야의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수출 다변화 대응 등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 찾고, 살고, 일하고 싶은 농어촌공간 조성

귀농·귀촌 증가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지원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읍·면 소재지에 필수적인 기초복합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고, 농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고, 첨단기술과 융합한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도 육성한다. 문화·돌봄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농림·수산·식품	215,153	△1,243	223,754	229,755	232,825	235,344	2.3
○ 농업농촌	160,705	△1,107	163,364	166,492	171,400	175,634	2.2
○ 수산어촌	24,218	△555	26,558	28,237	26,090	23,113	△1.2
○ 식품업	7,394	408	8,911	9,395	10,017	10,572	9.4
○ 임업산촌	22,836	11	24,921	25,630	25,318	26,025	3.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스마트 농업 확산 고도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되면서 농업 구조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은 농업인구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여 ICT를 활용한 기술 집약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기술수준으로 내부적 역량은 미흡하다.

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정상 착공하고 스마트 농업 분야 청년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자재·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R&D도 활성화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 경쟁력 있는 청년창업농 육성

농가 수는 매년 2만여호씩 감소하여 1~2년 이내에 100만호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 수준으로 인력 부족과 고령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 농가 중 후계농을 확보한 농가는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식품 분야는 식량 안보 차원 등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새로운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현장·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청년 대상 농지 임대, 청년농정착금지원 등을 확대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 농촌 삶의 질 개선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분리된 도시와 달리, 농촌은 주택·공장·축사 등의 용지가 구분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있으며,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열악하다.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농촌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소멸위기 탈출을 위해 농촌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분권 기조에 맞추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도 확충하여 농촌에 활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 식품·외식산업 혁신성장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사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강과 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으로 식품산업의 성장 여건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대부분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투자 저조로 발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분야는 수요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공유주방 등 푸드테크 확산으로 새로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망 식품분야 육성을 위해 식품 R&D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물 기반 식품소재 등 식품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능성식품 산업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 식품·외식업체에 대한 종합자금 지원 확대,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외식업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어업 안전 확보

수산자원 남획, 치어 포획,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최근 10년간 매년 4% 감소)하면서 2016년 처음으로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어획량이 높은 대형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 대상을 확대하고, 자원 관리 대상어종에 대해 산란기 일시적인 조업 중단을 지원하는 한편, 대체어장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지속 확대하고, 연안어장의 바다목장, 서식·산란장, 바다숲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 강화, 소비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 등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생산해역 및 위판 관리 기준 강화, 잔류물질 조사·평가, 청정 위판 모델을 조성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집적화된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수산물 이력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위생수준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편,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신선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단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및 인증 확대, 온라인 비대면 수출 활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원거리를 항해하는 근해 어선에 대해 장거리 위치발신기기 보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어업인의 안전 의식 제고와 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조업교육을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예방 및 자원의 육성·관리와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병해충)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3대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예산 증대 및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통해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동안 소외받은 임업인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지원 및 전문임업인 양성에 투자하고, 1980년 이전에 조림한 나무들의 벌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점차 교체하는 등 기능별 산림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자녀안심 그린숲 신규조성을 통한 도심권 학교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권 및 산업단지 등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고, 도심 내 바람 통로가 될 수 있는 숲공간(바람길숲)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특히 우리나라 3대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일원 및 도서지역의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기능 유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농업 저수지 관리 자동화율(전국 93대 권역, %)	71	⇒	89
▪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체결 비율(%)	15	⇒	30
▪ 스마트팜 혁신밸리(개소)	0	⇒	4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ha)	93	⇒	530

■ 추진배경

- 농촌인구 부족,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필요성 대두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주요내용: 지원대상 확대(신규 1,600명→신규 1,800명) 추진

- (지원내용)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농지임대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 창업농
- (선발절차)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발
- (향후계획) '20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하던 규모를 '21년에는 1,800명 선발로 확대하여 지원

■ 기대효과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추진배경

- 농지 매입비, 시설 구축비 등 초기 진입장벽으로 청년 스마트팜 창업에 애로
 -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없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도 청년들의 창농·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①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하여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 ② (혁신밸리 외 지역: 2개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별도 설치 중 ('20~'21: 강원 평창, 충북 제천)
- (사업규모) 개소당 약 4~6ha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는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위탁사업시행자)는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 (지원대상) 만 18~39세의 청년농 등 대상* (3인을 1팀으로 구성)
 - *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수료생에 대해 우선 지원
- (지원규모) 기본 3년간 임대 (1팀당 0.4~0.5ha)

■ 기대효과

-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배·경영 역량 향상 및 수익창출·자본축적 기회 제공

8. 환경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확충

우리나라 환경예산은 그간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중심으로 투자되며 환경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전국 상수도보급률 99.2%, 하수도보급률 93.9%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도농격차 문제가 여전하고 상하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하천·호소 내 녹조, 미량유해물질 등 하천 수질 문제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친환경차 초기시장 형성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최근 5년간 약 23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차는 연간 보급 대수가 2015년 2,850대에서 2019년에는 35,080대로 급증하였으며, 충전인프라(환경부 기준)도 2015년 313기(누적)에서 2019년 말 2,896기(누적)로 대폭 확충되었다.

전기차에 이어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수소차의 경우 2015년 48대(누적)에서 2019년 말 기준 5,102대(누적)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환경부 기준)도 2015년 9기(누적)에서 2019년말 기준 34기(누적)가 보급되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정비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19)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상대적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및 자원순환성 제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재활용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소각장·매립장 등 기초시설 설치사업 내실화에 예산을 투자하여,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86.1%(2012년 83.5%)에 이르는 등의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 폐기물 처리현황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		%		%		%
총 계	394,496	100	401,658	100	429,128	100	446,102	100
매 립	36,572	9.3	37,906	9.4	37,942	8.8	34,648	7.8
소 각	24,885	6.3	24,523	6.1	26,450	6.2	26,404	5.9
재 활 용	329,207	83.5	336,815	83.9	363,800	84.8	384,237	86.1
해 역 배 출	3,044	0.7	1,423	0.4	92	0.0	42	0.0
기 타	788	0.2	991	0.2	844	0.2	771	0.2

다만, 최근 국제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선별품, 재활용제품 등의 적체가 발생하는 등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활용품의 공공비축, 수입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조원)	6.8	6.9	6.9	6.9	7.4	2.1%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노후시설 개량 중심 수질사업 내실화 및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보급률을 고려하고,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편중된 환경부 예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신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동 수질사업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침하, 수도관 누수 및 적수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 시설 개량 예산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은 강화함으로써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7월 인천 수돗물 유충 유출사고로 정수장의 위생관리 및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 정·배수지 등에 방충설비 등을 보강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홍수예보체계 강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돌발홍수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면적과 공간단위의 강우관측이 가능한 전국단위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하천 예보나 도심침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심형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충하여 기존 대형 강우레이더와 연계할 계획이며, 강우레이더를 활용하여 도심지, 중·소하천, 산지 대상으로 1시간 이내 돌발홍수 조기에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인력의 분석에 의존하는 홍수예보체계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예보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대하천은 물론 중·소하천까지 전국하천에 대한 촘촘한 홍수예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 투자

2019년 기준 전국의 초미세먼지(PM_{2.5}) 농도는 23 $\mu\text{g}/\text{m}^3$ 으로, LA 13.3 $\mu\text{g}/\text{m}^3$, 런던 10 $\mu\text{g}/\text{m}^3$ 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변국 영향과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는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 연평균 농도 16 $\mu\text{g}/\text{m}^3$ 달성을 목표로 각 부문의 배출감축과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2019년 11월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2018년 4월)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2020년 1월 시행),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한중 맑은 하늘(청천) 계획 MOU 체결(2019년 11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뉴딜사업으로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과 소형 화물차의 LPG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 투자

파리협약('15.12월)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 예상 배출량(BAU) 851백만톤 보다 37%(315백만톤)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가정과 상가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발전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소계 온실가스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과 같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환경위기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생태 복원 조성 종합 계획'을 수립('21)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유통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제품·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새롭게 도입된 살생물제 승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상대적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불법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환경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환경분야	88,259	95,692	101,318	105,535	105,535	9.3
○ 물환경	40,060	43,020	46,971	48,829	48,829	5.5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8,177	7,821	8,336	8,986	8,986	7.6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26,371	31,044	31,939	33,364	33,364	24.7
○ 자연환경	6,360	6,310	6,415	6,569	6,569	0.7
○ 환경일반	4,638	4,725	4,832	4,960	4,960	1.1
○ 해양환경	2,653	2,772	2,825	2,827	2,827	△0.4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스마트 광역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19년 인천 적수사고 이후 높아진 수돗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된 인프라 정비 및 실시간 수량·수질감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물공급의 약 50%를 담당하는 광역상수도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ICT기반의 스마트화 사업을 착수하였다.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현으로 이상수질 유입 및 각종 사고에도 안전한 수돗물 생산체계를 실현하고, 실시간 수질·수량감시를 통해 신속한 사고인지 및 대응으로 단수피해 최소화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의 추진으로 상수도분야에 AI, ICT등 4차 산업 기술도입 확대를 통해 물분야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과 연계, 스마트 기술기반의 저비용·고효율 관리체계 도입으로 수돗물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상수도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 기초시설 개선 및 지류지천 수질관리 강화

그간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하·폐수처리 등 대규모 시설 설치에 집중 투자하였고, 전국 중권역(115개) 기준 목표수질 달성률은 2019년도에 75.7% 수준으로 상향되었다.(‘17년 69.6→ ‘19년 75.7%) 이는 도시개발 등 유역 내 오염원은 증가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하천 복원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노후화된 하·폐수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시설개량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지류지천에 소규모 자동감시망을 확충하여 본류-지류간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생태계 서식처를 단절하고 있는 하천 구조물에 대해 정밀 진단하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횡단 구조물 개선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지원 강화

전지구적으로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2018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31.4일)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주체의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야외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이상기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대상별 이용시설, 거주 장소, 이동패턴 등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수송부문을 집중 감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시화하고,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으로

노후경유차를 조속히 퇴출하고 신규 경유차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장 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비재정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이동측정차량 및 첨단 원거리 감시장비 확대 보급을 통해 보다 과학적 분석으로 오염원을 식별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등 오염원 원인규명 및 실증적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 및 참여를 제도화하고, 미세먼지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훼손지를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절차를 비롯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대책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으로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은 의무적으로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토록 하였고,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고유해성(발암성 등)·다량(1천톤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22년에는 소독제·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차질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지원하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안전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할 계획('21.4월)이다.

아울러, 그간 주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가시화된 이후 진행되던 주민 건강영향조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특성과 인구특성 등을 토대로 환경·건강성 지수를 산출하여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고위험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댐 안전성 강화

1968년 완공 이후 50년이 된 미국의 오로빌댐 붕괴 사고(2017), 2016년 관측 이래 최대규모인 5.8의 경주 지진 발생 등 시설노후화 및 지진 등의 댐 안전위협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그간 댐 설계기준을 개정·강화하였다.

변경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일상적 유지보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및 성능개선을 위한 대규모 시설개선의 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댐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게 배수하기 위한 비상방류 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한 물사용을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및 노후화에 따른 댐 심벽보강, 계측기기 설치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29개 댐에 대하여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노후화가 심한 14개의 용수댐에 대해 2018년도부터 우선 추진중이며, 다목적댐 15개에 대해서는 2019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0년 예타면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1년부터 단계별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폐기물 수거중단, 불법폐기물 등 국민·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투자를 집중 추진한다.(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 발표 예정)

경제성장,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유통 포장재, 1회용품 등의 감량을 위해 생산·유통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량하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민간 중심의 수거·선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수거·선별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 공공비축을 지원하고 재생원료 수입최소화와 국내산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NIMBY 시설로 설치·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고 신·증설이 어려워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및 불법투기 유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시설 등 주민선호 시설과 연계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융·복합형 폐기물처리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불법폐기물 처리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녹색산업 시장의 확대를 위한 탄탄한 성장 기반 구축과 산업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녹색산업 분야 기업이 성장하여 세계 녹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또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등 핵심산업별 물리적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실증·생산 등이 어우러지는 융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녹색전환을 통한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 순환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재원으로 융자, 펀드 등의 녹색 자금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분류 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평가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전기차 보급(천대, 누계)	170	⇒	847
▪ 제품생산량당 폐기물 발생량(kg/톤)	39.4	⇒	35.7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건수(개)	344	⇒	1,800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만족도 조사	75	⇒	80

■ 추진배경

- 인천 적수사고 이후, 수돗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인프라 노후화 등 공급 중단 위험이 증대되어 대책 마련 시급
- 전국 물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광역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필요

* 인천 적수사고('19년) 이후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진행 중('20년~)

■ 주요사업내용

- 전국 광역상수도 생산·공급全过程에 ICT 기반의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대응 인프라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 48개 광역상수도 시설에 취수원 수질감시, 스마트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자산관리시스템 등 구축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사업규모) 총사업비 2,356억원(국고 707억원, 수공 1,649억원)
- (사업기간) 2020~2023년
- (기대효과) 전국에 설치된 48개 광역수도시설에 대한 스마트 물관리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 기여
 -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과 연계, 광역상수도도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상수도全过程 스마트化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실현
 - 상수도 분야에 스마트 기술 기반의 저비용·고효율 관리체계 도입으로, 수돗물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저탄소 상수도시스템 구현

■ 추진배경

- 도시침수, 지반침하 등 하수도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프라 노후화로 하수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 및 공중위생의 기반이 되는 하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주요사업내용

- 지능형 처리장 운영,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 체계 구축 등 하수도全过程* 스마트화
 - * 발생·수집 단계(배수설비) → 이송단계(하수관로) → 처리(하수처리장)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35개 공공하수도관리청(수요조사결과 신청·선정된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간) 2020~2024년
- 세부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의 주요 요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 * 15개 하수처리장에 ICT 기반 계측·감시 및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시범 구축
 -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 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침수 및 악취에 선제적으로 대응
 - * 10개 스마트 하수관로 체계(도시침수 5개, 하수악취 5개) 구축
 - 하수도 시설(처리장, 관로 등)의 시설물 이력 관리, 자산 상태 빅데이터화, 데이터마이닝 등 자산관리체계 시범 구축
 - * 10개 지자체 관할 공공하수도(처리장, 관로 등)에 대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하수처리 전과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및 안정적 하수도 운영·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마련·지원 필요
- * 경제(저소득, 노숙), 건강(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직업(야외근로, 농업 등), 거주(쪽방, 지하층 등)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5항
- (사업내용) 쿨루프, 쿨링포그, 벽면녹화, 기후친화형 어린이시설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발굴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성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 기후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의 대상별 이용시설, 이동패턴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약계층 사업모델 마련

■ 추진배경

- 지나친 도시개발 확장 결과,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 도시 생태공간 축소로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환경 악화*(열섬현상 등) 및 생태계 회복 탄력성 저하
- * 서울의 경우 192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평균 기온은 1.9℃, 평균 최저기온은 3.2℃가 높았음(기상청, 2010년)

■ 주요사업내용

-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녹색복원
- 지역고유 생태계 보전(고유 생물종 서식지 조성)과 도시별 자연환경 특성 고려, 단절·훼손된 생태축 연결·복원 등 파편화된 서식지 복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간) 2020~계속
- 세부 사업내용
 - 도시 내 훼손부지 대상 확정(추가 수요조사 등), 복원 우선순위(환경 개선 효과, 환경불평등 문제 해소 등 고려), 복원방안 검토
 - 사업대상 부지별 조사·설계, 생태복원사업 시행(사업별 2년 소요, 1차년도 조사·설계, 2차년도 생태복원사업 시행)
- (기대효과) 도시생태계 건강성 강화(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휴식 공간에 대한 환경격차 해소, 온실가스 저감 등 보편적 생태복지 확대

■ 추진배경

-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및 코로나19(2019) 등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지속 출현으로 인명 및 경제 피해 발생
- 코로나19 발생으로 매개 의심 야생동물의 수입을 긴급 제한(2.21, 전세계)하였으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수입허가) 질병 발생시 야생동물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마련 및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
- (검역·통관) 야생동물 검역 근거 마련 및 야생동물 수입 가능 항만·공항 지정 등 검역·통관 제도 개선 및 검사 인프라 구축
- (유통)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 판매·개인 소유 관리 강화
- (질병관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원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상시 대응체계 확립

■ 기대효과

- 야생동물 질병 국내 유입 사전 차단, 전문 대응체계 구축으로 야생동물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 예방

■ 추진배경

- 주로 피해 가시화 이후 진행되던 건강영향조사 체계를 개선,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조사 실시 필요

◆ 환경오염 취약지역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실시(국무총리, '19.11.27)

-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 주민 호소 이전에도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것

■ 주요 사업내용

- 전국 난개발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특성과 인구특성 등을 반영하여 환경·건강성지수(1~4등급) 산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차등관리
- 고위험지역(1·2등급) 지역 대상으로 (약식)건강영향조사 추진('21~'23)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 1~2등급지(100개소)
- (지원기간) 2021~2023년
- 세부 사업내용
 - 제2의 장점마을, 사월마을 피해를 막기 위해 인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3년 내로 취약지역(1~2등급) 조사 완료

<전국 환경오염취약지역(난개발) 건강피해 예방 관리방안>

환경·건강성지수	배출특성	인구특성	건강영향	관리방안	비고
1등급	높음	높음	○	·역학조사	건강피해 인과관계 규명
	높음	높음	△	·건강영향조사	건강피해 사전예방 조사평가
2등급	높음	높음	×	·약식건강영향조사 (환경건강모니터링)	빅데이터 활용 건강피해 감시
3~4등급	-	-	-	·배출원 관리 (지자체)	특별점검 등 지도단속

- (기대효과) 전국 환경·건강성지수(1~2등급)에 따른 건강영향·역학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건강위험성 관리로 환경복지를 실현

■ 추진배경

- 경주지진('16.9), 포항지진('18.2)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現 설계·법적 기준에 미흡한 댐 시설물의 확충·보완 시급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된 댐이 다목적댐 20개 중 6개(30%), 용수댐 14개 중 10개(71%)로 노후화되어 안전성 확보 시급

■ 주요사업내용

- 지진, 시설노후화 등 재난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댐 시설물 내진보강 및 비상상황 대응능력(신속한 댐 수위저하) 확보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사업대상) 14개 용수댐(1단계) 및 15개 다목적댐(2단계)
- (사업기간) 1단계 2018~2024년, 2단계 2021~2027년
- 세부 사업내용
 - 취수탑 및 공도교 내진보강, 댐체(심벽) 및 여수로 보강을 통한 내진 안전성 확보
 - 비상방류시설 신설 및 확충으로 비상상황 대응능력 확보
 - 댐 주변 비탈면 보강 및 계측기기 보완
- (기대효과) 기존 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지진, 누수량 증가 등 비상상황 시 즉시 대처로 2차 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배경

- 전세계적인 실물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 시장은 계속 성장중
 - *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2.8%, 녹색산업 시장은 연 평균 3.6% 성장(WB, EBI, '12~'17)
- 국내 녹색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2%(242억 달러)로 일본, 미국 대비 각각 1/5, 1/18 수준(미국 31%, 유럽 30%, 일본 9.5%)
- 녹색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규모 확대 및 경제위기 극복 동시 실현

■ 주요사업내용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 육성
 - * '24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 ①청정대기, ②생물, ③수열에너지, ④스마트 물, ⑤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포함)
- (지원기간) 2020~2024년
- 세부 사업내용
 -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0억원* 지원
 - * 연간 최대 10억원(사업화 7.5억원, R&D 2.5억원)
 - ①(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
 - ②(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
- (기대효과)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 육성 등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위기, 산업경쟁력 둔화 상황을
동시 극복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제조·공정상의 국제규제는 강화 추세
-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제조업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오염
배출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녹색전환 필요

■ 주요사업내용

- (사업대상) 100개(중소·중견기업)
* ('20년) 10개소, ('21년) 30개소, ('22년) 60개소
- (사업기간) 2020~2022년
- (사업내용)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및 생산 효율·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전 과정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오염물질·재생에너지·폐기물 등 공장 내 자체 생산·처리 설비를
지원하여 공장단위 배출제로 달성을 지향하는 친환경 공장 모델 구축
-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율* 제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 단위 에너지 사용량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비율
(한국 25.5%, 독일 34.8%, 미국 36.9%)

9. 국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방비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5.7%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부문은 연평균 4.3%, 방위력개선부문은 연평균 8.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5년 29.4%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현존 전력 가동률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급식 및 군수품 품질 향상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 국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조원)	37.4	38.8	40.3	43.2	46.7	5.7%

* 본예산 기준

국방비의 특성상 인건비, 급식·피복, 군수지원 등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 예산 편성 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예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전방위 안보위협 주도적 대응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

잠재적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 및 군구조 개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①감시·정찰 전력, ②핵·WMD 대응 전력, ③비전통 위협 대응 전력, ④전작권 전환 핵심군사 전력, ⑤군구조 개편 기반 전력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군정찰위성, 중고도 무인정찰기 전력화를 통해 감시·정찰 능력을 고도화하고, 지대지·공대지 등의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확보로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보강하며, 미사일 탐지·요격·통제 체계를 확보하여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확장된 작전지역과 우리 군 주도 지휘 구조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여 튼튼한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 국방연구개발(R&D)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 투자 확대

첨단 국방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도형 방위 산업 육성 및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방R&D 분야는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인공지능, 초연결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의 총체적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조직을 개편하여 고위험·고난도 비닉무기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방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방산분야는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부품국산화 및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투자할 것이다.

■ 첨단전력의 적정가동률 보장 등 군수지원

첨단전력 도입·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강화로 현존전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고 감시장비 확대, 경계시설 보강 등 경계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전투체계 장비 보급, 전 장병에 방탄복·방탄헬멧 보급 등 위리어플랫폼 구축으로 전투효율성과 생존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비전통위협 대비 국방대응체계 발전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이버 정보 및 감시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이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긴급 재난에 대한 장비·물자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영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격리·치료 및 민간지원이 가능하도록 의료 장비·물자를 보강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군 구조 정예화 및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

상비병력 감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운영 시스템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병력은 감축되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스마트 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병력 감축 기조 하에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향아리형으로 간부 계급구조를 개편하고,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마일즈 장비 보급,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통합 조성 등 실전적인 과학화 훈련여건을 조성하여 단기간 내 숙련도 향상 및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전투임무 전념을 위한 장병 복지 개선

장병은 오로지 전투 준비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주 및 의료 등 기본적 복무여건을 사회발전 수준에 맞게 향상시키고 군 생활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자기개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병 보급 인상,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개선, 급식 질 개선 등 기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군 근무여건 보장 등을 통하여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방환경 조성

장병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문제를 새로운 재난으로 인식하여 각종 군사시설의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군사시설 주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이 가능하도록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도입, 군 유허시설 철거,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국방예산 효율성 제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방개혁 2.0 등 국방분야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 전반의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군수품 상용화 확대,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 국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 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방 분야	501,527	483,782	529,174	560,728	585,868	609,290	5.0
○ 전력운영비	334,723	326,146	358,437	385,529	400,178	411,335	5.3
○ 방위력개선비	166,804	157,636	170,738	175,199	185,690	197,955	4.4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방산기업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

방위력개선비의 80% 이상을 국내투자 정책으로 추진하고, 방산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실 발생비용 보상 원가방식에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유인 및 적정원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사업정보공개를 확대하는 Debriefing(업체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등 공개), 업체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DAPA-GO를 통해 업체의 방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기동헬기, 전차·장갑차 파워팩 등 국외도입 계획 중인 무기체계·부품의 국산 전환을 추진하고, 국외 무기체계 구매시 일정 비율의 국산 부품 포함을 의무화하는 「Buy Korea」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육성

세일즈 외교, 수출 금융지원 및 산업협력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방산수출을 확대·지원하며, 방산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체계적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 강화

PBL 등 선제적 군수지원 확대로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계획정비 강화로 핵심전력 정비적체를 해소하는 등 군수지원을 강화해 현존 전력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첨단무기체계의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초반 주요 장비 능력발휘 및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신규 전력화 장비에 부합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방탄복·헬멧의 100% 확보를 통한 전투 생존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 대응능력 강화

감염병 등 질병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능을 보강하고, 대테러·대화생방,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장비·물자를 보강하는 한편,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병의 진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스마트 국방운영

병력 감소 자원을 간부·군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투부대는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간부 획득·운영체계 개선으로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기존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없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추진하기 위해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상·증강현실을 통해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AR/VR 가상모의 교육훈련체계 확대,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 발전적 군 복무를 위한 장병복무여건 개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며 소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전역 후 사회적응 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으로 미래 준비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개인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군 간부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보장 및 지역사회 상생 도모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를 확보하고 군 구매물량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폐수 처리시설, 노후 관로 개선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유류배관 지상화로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석면함유 건축물을 개선하는 등 국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철거 및 환경정화 사업, 사용하지 않는 군 유휴시설 철거 등을 통하여 주민 친화적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부대 누수 개선을 위하여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주둔지별 누수 여부를 조기진단, 조치함으로써 수도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체계 중 유사·중복체계는 통·폐합하고 전군 공통서비스는 단일체제로 개발하여 운영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더불어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전력운영비 중 후속군수지원 비중(%)	10.4	⇒	12.0
▪ 방위력개선비 국내투자비율(%)	72.9	⇒	82.4

■ 개요

- 방산업체 육성·지원을 위해 '74년 이후 적용해 온 『실 발생 보상방식』으로 인해 원가 절감 유인 부족,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방산수출을 확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제도를 개선

■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 방산원가구조 개선 T/F 발족 : 2019. 2월
- 방산물가 원가계산 규칙 등 5종 개정 발령 : 2020. 1월
- 표준원가(방산노임단가, 기준노무량) 산정 추진 : 2020. 4 ~ 9월
- 방산내부통제/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기준 수립 : 2020. 5 ~ 8월

■ 개선 효과

- 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방산업체 원가절감 유도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 기여

■ 개념

-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그 수행성과(performance)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현 문제점

- 주요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해외구매 및 주문제작 형태로 조달기간 장기화
- 주요 무기체계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 애로에 따른 장비가동률 저하

■ 추진경과

- 新정비지원개념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 도입 검토 : 2006~2009년
- 제도 시행기반 구축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정 등) : ~2010. 6월
- 시범사업 추진 (공군 KT/A-1 등 3개 장비) : 2010~2011년
- 주요 무기체계 적용 확대(現 총 12개 장비) : 2011년~
 - * 공군 F-15K, (K)F-16 엔진 등

■ 개선효과

-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 및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
-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최소화 및 재고수준유지 비용 감소

10. 외교·통일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외교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재정투자 확대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 증가, 우리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 확대,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등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

미중간 경쟁, 보호무역 추세 확대 등 역세계화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미·일·중·러 주요 4국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해왔고, 양자·다자간 회의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통적인 정부간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외교를 통한 민간간 교류협력도 확대해 왔다.

또한, 반세기만에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농업, 산업 등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 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1조 4,667억원에서 2019년(잠정) 2조 8,96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ODA/GNI비율도 2011년 0.12%에서 2019년(잠정) 0.15%로 증가하였다.

<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 분야(조원)	4.5	4.7	4.6	4.7	5.1	3.0%

* 본예산 기준

■ 공공외교 역량 지속 강화 및 국민외교 추진

스포츠 공공외교, K-Pop을 포함한 한류 확산, 한국 바로 알리기, 코로나19 대응 공공외교 등 문화·지식·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호감 및 신뢰를 증진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우호적 공감을 확대하였다.

공공외교를 범정부·범국민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외교 통합조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지 맞춤형 종합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외교정책 수립과 추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틀 마련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18년에는 남과 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철도·도로, 산림,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 화해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탈북민 정착지원 등 분단의 고통을 해소·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교육 확대 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 등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나,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차질 없이 시행('21.1.16.)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그에 따른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법률에 근거한 영사조력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사조력법 시행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는 한편, 재외공관 영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사조력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향후 영사조력법의 시행 경과를 관찰하며 우리 국민에게 한층 강화된 영사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 제공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민외교·공공외교 역량강화 도모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아우르는 융복합 공공외교를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 가속화 및 SNS 등 뉴미디어 기반 온라인 소통·교류 활성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공공외교도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공간인 국민외교센터를 비롯하여, 국민외교 모바일앱 및 SNS 등의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국민외교 소통·참여행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 및 상생의 경제협력

아세안 및 인도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 다변화 및 상생의 경제 협력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사람, 번영, 평화)을 구체화하고, 협력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제별 실질 사업(보건협력, 연계성 증진사업, 개발협력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계성을 증진하는 신북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국인 러시아 관련,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및 러시아 전담부서 신설(외교부)로 마련된 모멘텀을 이어나가, 정세 분석 및 현안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하여 대러 전략외교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적 개발원조 추진

향후 5년간 ODA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자리 정책 등 국가적 정책과 ODA 사업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제안사업 등 통합적 사업 발굴·기획 기제의 지속 발전을 통해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기반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ODA 전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ODA 효율화에 주력할 것이다.

■ 체계적 관리·리모델링을 통한 재외공관의 기능·자산가치 유지

재외공관 국유화 건물의 물리적 기능 및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화 건물 리모델링 주기는 30년으로 설정하고, 향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연구용역도 수행할 계획이다.

■ 남북관계 복원·발전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통하여 북미관계의 실질적 선순환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DMZ 등 남북 접경지역을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체감하고 남북이 호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번영의 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호적 담론과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55,092	57,469	59,784	62,186	64,586	4.1
○ 외교부문	40,505	42,535	44,481	46,468	48,515	4.6
○ 통일부문	14,587	14,933	15,303	15,718	16,071	2.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공공외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공고화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확산하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간 상호 협업 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공공외교 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22-2026) 수립을 통해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추진

남북정상이 합의한대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여 DMZ의 복합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북간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출입사무소 등 접경지 남북협력시설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DMZ 등 통일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 대중사업 등을 준비·추진할 예정이다.

■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민족 동질성 회복 지원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국 정책협의, 해외 신진학자 교류 등 평화통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국제경기 단일팀 출전, 문화유산 공동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 정착지원은 탈북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거주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 정책과 남북교류 과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써 통일+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20		'24
▪ 재외국민보호제도 만족도(점)	76.0	⇒	77.0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서비스 만족도(%)	89.5	⇒	89.8

■ 추진배경

- ①전 세계적인 디지털 외교 강화 추세(179개국 정부수반·외교장관 SNS 사용 중*), ②코로나19를 계기로 적극 추진한 디지털 공공외교 경험 결과 확인된 디지털/온라인 기술 및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의 높은 파급력과 잠재력,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 디지털 공공외교 본격화 및 체계화 시급

* 「디지털 외교의 추진전략 연구」(김상배, '18.6월)

- 특히, 최근 조성된 우호적인 공공외교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

* ①코로나19 계기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온라인·비대면 소통과 교류 활성화,
 ②코로나19 대응 관련 모범사례로서 국가적 위상 및 긍정적 국가이미지 확산,
 ③문화 분야(영화 '기생충', K-pop 등) 성과에 따라 증대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대

■ 주요내용

- '21년도 공공문화외교국 신규 사업('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디지털 공공외교 본격화 및 체계화
- 부내 전담 인프라 구축을 통해 ①외교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다국어 콘텐츠 주기적 제작, ②해외 국민과의 온라인 쌍방향 교류 행사 개최, ③해외 국민 대상 외교부 SNS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재외공관 주도 사업 지원(예산 지원, 범용/다국어 콘텐츠 제작·배포) 및 담당자 교육·컨설팅을 통해 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효과성 제고
- 데이터를 활용한 현지 동향·여론 및 선호도·반응 분석을 통해 ①디지털 공공외교 메시지·콘텐츠 전략화, ②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평가·환류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기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공공외교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및 우리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 국민의 평화 체감도 제고
-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 GP 시범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사항 이행
- DMZ 포럼, 남북공동 종합조사, 웹플랫폼 구축,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 합의사항 이행 동력 확보

■ 주요사업내용

- DMZ 국제포럼 개최, DMZ 종합조사,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 통합 플랫폼 구축, 「남북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 준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특징)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 및 계획
- (기대효과) DMZ의 복합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체감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법, 치안 등 법질서 유지와 사회통합, 재난관리 관련 투자는 2015년 16.9조원에서 2019년 20.1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의 범죄불안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인권 지원 확대 등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였고,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재난 예방 투자를 확대하였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조원)	16.9	17.5	18.1	19.1	20.1	4.4%

* 본예산 기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의 다양한 의료·경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일 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심리치유, 상담, 법률조력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임금채불자 및 차상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서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 복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운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 지원하였다.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성폭력, 약물, 정신질환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시스템 기능 개선, 전자감독 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 및 비상 경보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신속대응팀 확대 등 다양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 재소자 등 인권보호 강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던 수용률이 2016년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위헌판결이 있는 후 적극 재정 투입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재한외국인 사회정착 등 통합지원

입국초기 외국인에게 한국의 기초법·제도, 체류자격·국적 관련 출입국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보다 많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지원하였다.

■ 국민생활에서의 안전체감도 대폭 개선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다양한 기관의 치안참여를 촉진하는 등 빈틈없는 치안협력망을 구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한 결과 국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대폭 향상('16년 69.8 → '19년 74.7)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17년만에 두자릿수('19년 전년대비 11.4% 감소) 감소를 기록하였다.

< 체감안전도 및 주요 범죄 현황 >

(단위 :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증가율
체감안전도 조사	69.8	73.3	73.5	74.7	2.3
5대범죄(살인, 강도 등)	535,934	501,978	488,288	499,029	△2.4
여성대상 범죄	28,993	32,234	31,396	31,437	2.7
교통사고 사망자	4,292	4,185	3,781	3,349	△7.9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최근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평균 강수량과 국지성 호우빈도는 증가 추세로 방재시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천 및 제방 보수,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 및 피해복구 지출 소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재해예방 인프라구축 재정투자 추이 >

구분(억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재해위험지역 정비	3,688	4,293	3,523	4,640	3,692	3,586	3,760	3,992	4,365
우수저류시설	557	690	655	881	718	710	695	553	695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점검 실명제 및 지자체 평가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경우, 종전에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 사고만 조사하였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19.3월 시행)하여 모든 승강기 사고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 해양경계 및 해양사고 예방·대응 강화

우리 해역의 해상경계 및 순찰 강화, 해양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함정 및 헬기, 항공기 등을 확충하고 노후함정 대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함정은 2010년 288척에서 2020년 352척으로, 헬기, 비행기 등 항공전력은 17대에서 25대로 크게 증강되었으며 노후함정은 매년 4~5척씩 대체 건조 중이다.

특히 항공전력 중 대형헬기가 처음으로 2014년 부산에 배치되었으며 이후 2017년에 목포에 배치되어 해경의 해상 순찰 및 해양사고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경인·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영흥수도·울산신항·포항구항 등 관제사각지대에 레이더를 확충하여 레이더 음영구역을 해소하는 한편, 관제면적도 대폭 증가되었다.

■ 해양주권 수호 및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창단하고 경비함을 증강배치 했다. 또한 현장중심 단속체계 개편과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불법조업 근절 대책으로 불법침범 및 무허가 외국어선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불법 외국어선이 많았던 서해 NLL 지역 경비를 위해 연평·대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상시 배치중이며 기동전단 운영,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 등과 수시로 합동훈련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불법 조업 외국어선 조업 현황 등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2020년 6월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 '창녕 만9세 의붓딸 학대사건' 등 아동학대 중상해·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에 부각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를 확충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사들의 관리 사례 수를 줄이는 한편 전문적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등 사례관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19) 68개소 → ('20) 71개소 → ('21) 81개소

성폭력 범죄, 흉악 범죄 등 중대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 범죄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여 위험 시 위치정보를 전달, 경찰이 출동하는 신변보호강화 조치 사업을 확대한다.('20년 대비 위치확인장치 660대 추가 운용) 또한 스마트워치 고도화로 위치확인 속도·정확도가 향상 되었으나 그간 기술적 문제로 112관제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담당 경찰관 스마트폰 앱으로만 확인하던 것을, 112상황실 근무자도 바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신변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2019년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2019년 8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2020년 3월 'n번방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문지마 범죄, 증오 범죄, 디지털 상에서의 성폭력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범죄피해구조금 예산도 2021년 약 9억원 증액 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교정시설 인권적 수용환경 조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수용률 100% 수준을 목표로 유희부지 내 수용동 증축, 시설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 과밀수용율 변화 ('18) 114.4% → ('19) 113.4% → ('20) 110.7%
과밀수용 해소 목표 ('21) 108% → ('22) 106% → ('23) 103% → ('24) 100%

또한, 원격의료센터를 운영하여 교정기관 부속의원과 외부의료시설 간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보호실, 진정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용자의 기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시설 없이 밀폐형으로 설계된 고층형 교정시설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온돌방식의 직접난방으로 거실난방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년원생·재소자·보호관찰대상자 등 인권보호 확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하여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년원생과 피치료감호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약품과 의료비를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통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처우도 강화할 것이다.

■ 재소자·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로 사회정착 지원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가 많고 일반인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업훈련 유망종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작업장을 확충하여 좁은 거실에서 대기하는 미작업자를 줄여나가고, 출소 후 취업이 가능한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과 연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수형자 및 출소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확대하여 취업 기회를 높이고, 여성 출소자 등 갇생보호대상자에 대한 특화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맞춤형 취업처를 알선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 비대면 출입국업무 영역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제주공항 국내선 자동출도검색대 설치, 전자여행허가제 및 외국인 숙박신고제 등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소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자료 검색 및 관련 서류 확보의 어려움 등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법정보공개시스템 및 통합민원시스템 등 사법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법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일명 ‘고유정 사건’ 이후 이혼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이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각 가정법원에 이혼가정 자녀들이 안심하고 비양육친부모를 면접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의 범죄재발 방지 및 올바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 인권보호를 경찰행정의 기본원리로 정착

인권정책연구 및 교육 강화, 인권영향평가 확대 시행 등 경찰관의 인권보호의식 확립 노력을 지속하고,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환경 개선, 진술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인프라 확충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형사 소송절차에 피해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평가를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근본적 갈등·분쟁 원인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재해·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요인 증가, 특정 시기의 강수량 감소 및 물 부족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 증가 등 재해 예방투자의 필요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재해·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해예방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사업 단위’에서 ‘마을 단위 종합정비’ 방식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 시설도 지속 확충하고 그동안 재원 부담으로 인해 정비가 여의치 않았던 사유지 내 붕괴 위험지역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민 일상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교통안전 강화, 산재 감소, 자살예방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국민 일상보호를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위험도로 개선, 도로 유지·보수,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교통 SOC에 대한 안전 보강 투자도 중점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을 2022년까지 완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상담요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노후 시설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면·현장방문 위주의 지자체 평가 방식을 지역안전수준 종합평가로 개선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해양사고 대응능력 강화

해양사고 예방 및 적극대응을 위해 전국 96개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 13척을 추가 도입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96개 파출소 중 25개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설치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잔여 69개 파출소는 초동 잠수요원을 양성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30분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및 대형 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대형헬기를 거점별로 배치하고 구조사 및 관련 구조장비 등도 보강할 계획이다.

■ 민간 수색구조 협력·지원 체계 강화

해양사고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민간자원과의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하고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대원의 피복 지급·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수난구조 활동시 활동비 등을 지급하여 해양사고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진, 대형화재 등 특수재난 중점 대응력 강화

지진, 대형화재 등 특수재난 대응력 강화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포항지진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전 소방공무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비 비축기지과 지진구조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 구조 훈련을 위한 도시탐색 훈련장을 건립하고 권역별 지진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대형화재를 대비해 소형 사다리차 및 산불전문 진화차도 보강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	208,371	217,642	227,990	237,435	245,619	4.2
○ 법원및헌재	21,660	21,961	22,846	23,887	25,009	3.7
○ 법무및검찰	40,737	43,235	45,511	47,353	49,149	4.8
○ 경찰	120,206	123,394	128,452	134,057	139,086	3.7
○ 해경	15,238	15,794	17,081	17,798	17,445	3.4
○ 재난관리	10,529	13,258	14,099	14,341	14,930	9.1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등 사례관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가 공공화되어 시군구로 이관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담당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될 것이다.

■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에 대해 종래에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9년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몰수·추징한 피해재산을 민사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전한 국경관리 및 감염병 대응 강화

문제외국인의 입국은 사전에 차단하되 관광객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심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대테러 및 감염병 의심 외국인 등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숙박신고제가 2020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및 테러경보 발령 시 숙박업자에게 숙박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염전파 경로 및 감염의심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을 신속히 하여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소송비용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보호 및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조정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한 조기조정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시간·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것이다.

■ 수사권 조정 및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용 조사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화폐,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 및 빅데이터 활용 등 수사기법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여성-아동 피해자 조사시 인권 보호 강화

경찰의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조사실도 인권 친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챗봇’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대처요령, 관련법률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AI를 통한 진술 조서 작성으로 2차 범죄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을 확충하여 가·피해자간 동선분리, 대기공간 확보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더 기울일 예정이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68% 이상은 전·월세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영세한 경우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나 파손 피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9년에는 37개 시군구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어 2020년부터는 보험료 지원을 2배 인상(국고 25→50%) 하고, 세입자 재고자산 보장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노후헬기 대체 신규 헬기 도입으로 해양사고 대응능력 확대

현재 보유중인 노후헬기는 자동비행장치 미장착으로 야간 수색구조 임무가 제한되어 24시간 긴급 구조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입가격 대비 연평균 정비비가 과다 소요되고 정비·수리 부품 조달기간도 장시간 소요되어 항공기 가동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구연한(26년) 도래에 맞춰 야간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노후헬기를 단계적 신형 헬기로 대체하여 주·야간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이 가능하고 대국민 해양치안 서비스도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 경비함정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및 친환경 함정 도입

경비함정이 크게 증강되고 사용연수에 따른 수리대상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함정정비 및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운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정 계획정비비를 대폭 확대하여 함정 가동율을 향상하고, 함정정비 과부하 해소 및 대형함정 자체정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정비창인 서부정비창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경비함정 및 LNG방제정을 도입하여 진동·소음 및 배출가스 감소 등 해양경비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의 해상교통관제 운영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0개 주요 항만(15개소) 및 연안(5개소) 해역에 선박교통관제(VTS)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2년에 목포·군산, 2023년에 제주·서귀포 등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속초항)에서 경북(울산항) 연안 해역까지 관할하는 동해권 연안 VTS를 신규 구축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 항만에서 연안까지 빈틈없는 선박교통 안전체계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 지원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각 지역소방본부별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헬기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사고에 가장 인접할 헬기에 출동명령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출동시간 최소화와 더불어 유류비 등 헬기 운용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통합 헬기 정비대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정비로 안전한 헬기 조종을 지원하고, 예산 절감과 헬기 가동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20		'24
▪ 법률구조건수(만 건)	180	⇒	190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7.4	⇒	7.2
▪ 교정시설 과밀수용률(%)	110.7	⇒	100.0
▪ 범죄발생 검거현황	84.1	⇒	86.5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개소/누계)	20	⇒	80
▪ 연안사고 인명구조율(%)	88.0	⇒	88.2

■ 추진배경

-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 비대면 ‘챗봇’을 활용하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권리 관련 정보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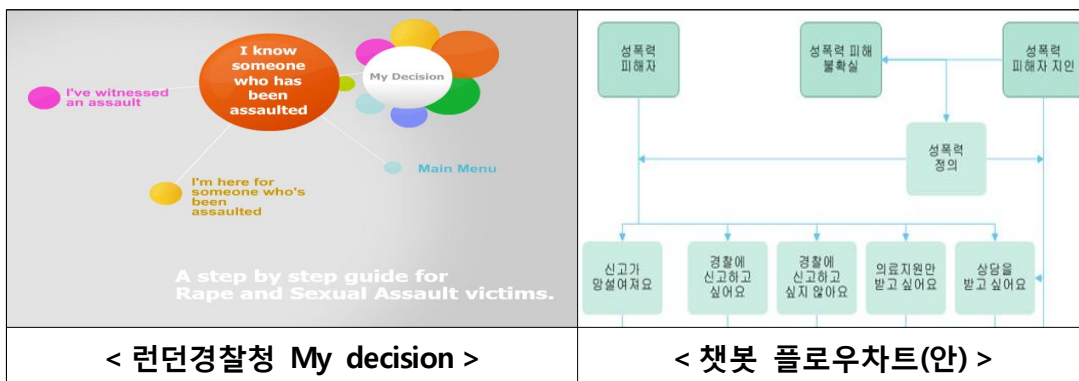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상담 챗봇*) ‘챗봇’ 활용 비대면 상담 실시

* ① 상담·신고, ② 공소시효 계산, ③ 간이 고소장 기능 등 제공

- (플로우차트* 구축) 피해자 의사결정·선택에 따라 신고 및 절차, 대처요령, 유형별 지원정보 등 단계별 안내 흐름도 제공

* 직관적인 의식 흐름에 따라 항목을 선택해 내려가도록 구성
(예 : 런던경찰청 홈페이지 My decision 운영)



- (보호·지원 정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 및 전문기관의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 피해자 대상 통합정보 제공 및 지원 연계

■ 기대효과

- 피해자가 ‘웹’상에서 ‘챗봇’ 등을 통해 경찰 및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정보 수집 → 신고 활성화 및 2차 피해 방지

□ 추진배경

- 노후헬기 자동비행장치 및 임무장비 미장착으로 야간 수색구조 임무가 제한되어 24시간 긴급 구조대응 한계
- 카모프 헬기 도입가 대비 연평균 정비비 과다 소요, 정비·수리 부품 조달기간 장시간 소요로 항공기 가동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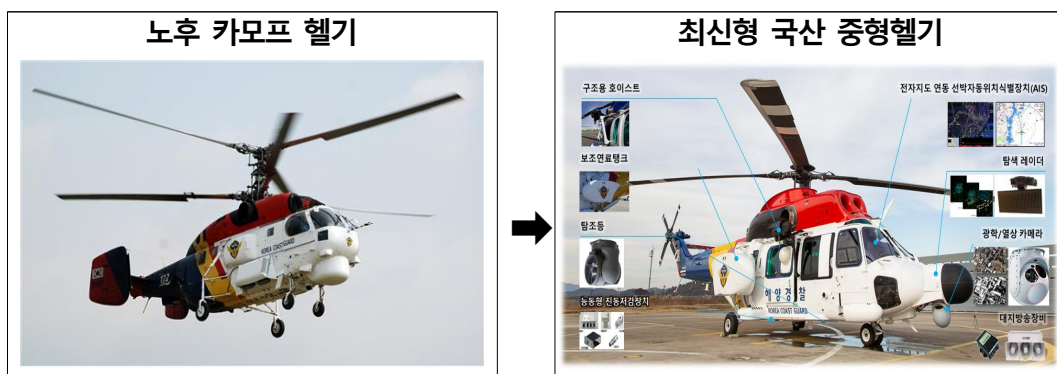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보유) 카모프 헬기 8대 등 회전익 19대 보유(대형2, 중형12, 소형5)

기 종	소 형	종 형			대 형
	펜더	카모프	AW-139	흰수리	S-92
대 수	5	8(40%)	2	2	2

※ '20년 기준 노후헬기는 총 8대(카모프)로 보유헬기 총 20대 중 42% 해당

- 내구연한(26년) 도래에 맞춰 야간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노후헬기 (카모프)를 점진적으로 교체
- 내구연한 근거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3조(내구연한)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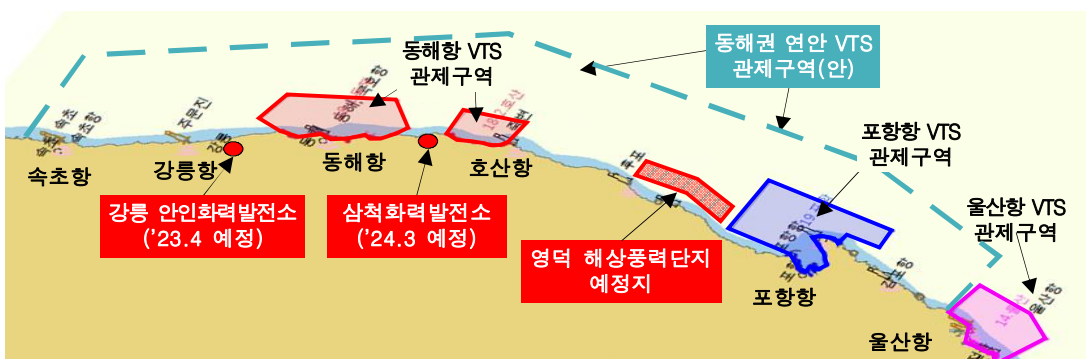
- 효율적 예산투입으로 국가 예산 절감 및 기 도입된 국산헬기로 도입시 조종사 관리 및 유지보수 측면 효율성, 내수시장 증진
- 주·야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며 대국민 해양치안 서비스 향상

■ 추진배경

- 전국 주요 항만 및 연안 해역에 VTS 시스템 운영 또는 구축 중이나, 동해권 연안 해역은 VTS 부재로 해양사고 증가 추세임
 - ※ '15년 대비 '18년 강원·경북 항만 내 해양사고는 46% 감소(67→36건)한 반면, 항만 VTS 관제구역 밖 영해는 해양사고 81% 증가(206→373건)
- 강원 강릉·삼척에 화력발전소 건설('18~'24) 및 경북 영덕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18~'20) 등 향후 항해위험요소 증가가 예상됨
 - ※ 화력발전소 및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운항선박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 강원(속초항)에서 경북(울산항) 연안 해역까지 연안 VTS를 구축하고, 기존 항만 VTS를 이전·통합하여 항만에서 연안까지 관제 시행
 - ※ 기존 동해·포항항 관제센터를 통합하여 연안 VTS 구축 추진
- 동해·포항항 레이더(옥계 등 6개소)와 연계하여 강원~울진~경북 일대에 연안 해역 탐지를 위한 레이더 6개소 신규 설치
 - ※ 기존 항만 VTS 레이더 연계로 예산(120억원, 6개소×20억) 절감 전망



■ 기대효과

- 전국 항만에서 연안까지 빈틈없는 선박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선박관제가 가능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여 대응장비를 비축하고 대응인력 정예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및 시설구축 필요
- 경주지진('16년, 규모 5.8)과 포항지진('17년, 규모 5.4)의 영향
 - 최근 지진 발생(규모 2.0 이상)은 이전 10년('06 ~ '15년, 53.5회)에 비해 대폭 증가 추세
 - 대규모 도심지역 지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로 지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대비·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현장 대응인력 정예화를 위한 권역별 도시탐색훈련장 건립

구 분		사업기간('21~'25년)					비고
		21	22	23	24	25	
도시탐색 훈련장	영남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 대규모 지진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4권역 장비 비축기지 건립

구 분		사업기간('21~'25년)					비고
		21	22	23	24	25	
비축 기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영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 비축물자 : 지진대응장비 도입(47종 2,456점×4년)

■ 기대효과

- 대규모 지진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전문인력 및 장비의 집중투입, 초기 재난수습으로 피해규모 최소화
-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재난대비 역량강화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지방교부세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역사회 혁신 성과를 창출·확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최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투자는 5년간 연평균 5.7% 증가하였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조원)	58.0	59.5	63.3	69.0	76.6	5.7%

* 본예산 기준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형평화 및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5%→11%)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 과세화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으며, 지방재정정보를 통합·공개하는 「지방재정365」를 만들어 지방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추가적으로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19년 15%, '20년 21%)하여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

정부는 접경지역 및 섬 관광 활성화, 서해5도 정주권 개선 등 소외·낙후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적극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섬의날 행사 추진, DMZ 內 평화의 길 조성, 동서녹색 평화도로(강화~고성)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연도교 건설 등 섬·접경지역 특화 관광개발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낙후된 미군 공여구역주변 및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에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별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지원 기능 강화 및 주소체계 고도화 등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안내 및 신청에서 처리, 결과확인 등을 한 곳에서 완결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재외공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의 민원처리시간 단축(1~2달→1주일 이내)을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여 왔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하여 3년 이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5,763개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132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폐기·통폐합을 결정하였다. 또한 제도·환경 변화에 따라 일몰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222개를 신규 통폐합 대상으로 식별하여 약 55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절감하였다.

2018년에는 325개소 344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공공기관 등의 357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평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침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EU 진출 한국기업 편의 및 보호를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정부혁신 노력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 방식 등 4대 역점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도입 및 확대,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열린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문서24' 활성화 및 공공서식 개편을 통해 국민 편의지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기관간 협업을 활성화 하고 단순·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취업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7.5만 여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도 약 2만6천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 디지털 일자리' 유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1만 5천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자생하는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개발·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및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과거사 정리·기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구 2.28민주운동 등의 추모 사업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학술연구 및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舊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가칭)민주인권 기념관 건립을 비롯하여, 부산 민주공원 부속건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등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또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을 진행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차원의 전문적 치유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거창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 등이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프라 조성·확충도 새롭게 추진한다.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대와 정부혁신 지속 추진

정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중인 국민참여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책참여방식으로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지자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해결하는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대상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 친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문제(일자리 부족, 단절·고립 등)와 지역문제(원도심 쇠퇴, 인구소멸 등)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질병, 환경오염, 미세먼지 문제, 에너지, 자원 재활용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공에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 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기반 확립 및 대민서비스 혁신 추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정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 정부혁신 및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위해 본인 정보를 국민이 직접 관리·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하고 접수·처리하는 국민비서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의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신속 개방,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분석·공동활용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개방 등 데이터 활용 과제와, 공공부문 유선망의 5G 무선망 전환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대면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분야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간다. 기관별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교체 시기에 맞춰 보안요건을 갖춘 민간 또는 공공보안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할 경우 여러 기관이 HW·SW 공유가 가능해져 각종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활용 확대와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사업의 추진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스마트한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강화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고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과 이슈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	790,129	865,227	876,113	919,466	948,800	4.7
○ 입법 및 선거관리	14,184	10,945	15,647	11,270	15,718	2.6
○ 국정운영	6,125	6,457	6,354	6,401	6,448	1.3
○ 지방행정재정지원	537,039	562,217	560,436	582,189	609,058	3.2
○ 재정·금융	195,829	243,446	251,463	276,874	273,838	8.7
○ 정부자원관리	8,702	12,879	12,863	12,809	12,731	10.0
○ 일반행정	28,249	29,282	29,351	29,924	31,008	2.4

* 본예산 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권 지속 추진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7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19년 4%p, '20년 6%p)되어 연간 약 8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는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배분에는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이하 전환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전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환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간 구성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 기능 이양방안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여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및 판매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로 2020. 5. 1. 제정, 2020. 7. 2.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발행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득 및 소비의 역외유출 최소화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총 15조원('19년 2.3조원, '20년 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6~8%(불교부단체는 3~4% 한시지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사랑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별 발행액 및 판매액 등을 취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효과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상품권 발행 기반을 조성하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한다.

다만, 각 지역마다 구매·환전 한도 등이 다양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협의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유통과정에서 부정유통 등 부작용이 없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확산하고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통, 홍보 등을 추진하고 전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박람회 참가, 영상 제작 등을 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18년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비용 보전 지원
※ 총 100억원(군산 61억원, 거제 20억원, 경남 고성 6억원, 영암 3억원)
- '19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액을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약 884억원 지원
- '20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발행액을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의 4% 지원 및 10% 할인판매를 위하여 약 6690억원 지원
※ 발행규모 : '18년 66개 지자체 3,714억원 → '19년 177개 지자체 2.3조원
→ '20년 230개 지자체 9조원

■ 주요내용

- **(개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종류)** 그 형태와 발행 업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류(紙類), 모바일, 카드형 등 다양함
- **(혜택)** 구매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포인트 적립이나 사용 시 일정금액 환급 등 혜택이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혜택이 존재. 그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

■ 기대효과

- 소비 진작 : 지역주민의 타지역 구매 대체효과, 관광객의 지역 내 추가 구매효과 등 지역 내 소비 확대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17.12월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 증가 (양구) 2.13%, 연 43.5만원 증가
(화천) 1.12%, 연 22.9만원 증가, (춘천) 0.1%, 연 0.21만원 증가
- 가맹점 매출증대* : 군산사랑상품권 시행 이후 가맹점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
* '18.11.5.~12.14. 8,400개소 가맹점 전수조사,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 지역상권 이용 증대* : 군산시 내 응답자 73.2%가 상품권이 주민 가계와 지역경제에 되고, 59.1%가 상품권을 사용한 적 있으며, 61.1%가 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
* '18.12.21.~12.26. 군산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9명, 한국갤럽 전화조사

제 5 부

재정혁신 방향

제5부 재정혁신 방향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1) 지출 구조조정

(1)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투자되던 지출은 과감히 절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 미래 재정수요에 기반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추진

인구·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소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등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량지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 제도개선 추진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부처별로 유사·중복사업, 저성과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부처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자로 환원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참여자격 사전점검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소해나갈 계획이다

2) 지출구조 개선

(1) 추진배경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핵심사업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핵심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년간 61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예산절감방안도 도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지출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큰 상황으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 핵심사업평가 심화 운영

2020년도에는 현장애로요인,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높은 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의 파급효과로 향후 재정 및 사업수행여건이 변화할 것을 고려하여 재정투자 방향성, 지출효율화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기존 합동현장점검이 소수의 수혜자와 전달기관의 의견만을 특정하여 청취하게 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선

심층평가 주기와 예산순기를 일치시키고 과제별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협업예산 활성화

(1) 추진배경

단계별·분야별로 상호 연계되어있는 사업들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이 어렵고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동안 R&D, ODA, 생활SOC 등 일부 분야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효과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재정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추진방향

부처간 연계·협력이 긴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군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예산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기별로 적절한 분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등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적 분업형 과제, 신약개발 등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통합적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주기별 협력형 과제, 산업단지 지원과 같이 개별 부처 단위에서는 지원의 한계가 있어 여러 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제 등 유형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재정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필요 소요를 적극 지원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협업과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2. 수입기반 확충

1) 비과세·감면 정비

(1) 추진배경

정부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2) 추진방향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면서 성과 평가 내실화 등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자율평가의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 평가서 작성 시 소관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 추가를 허용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개선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별 세법상 특례항목의 조세지출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세지출 예산서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2) 탈루소득 과세 강화

(1) 추진배경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2) 추진방향

■ 역외탈세 과세 강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추가하는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체납관리 강화

체납액 납부 촉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을 체납액 30% 이상에서 체납액 50%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3) 재원의 효율적 활용

(1) 추진배경

기금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19년 기준 785.9조원으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수익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금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해 소규모 기금까지도 자산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추진방향

기금 맞춤형 여유자산 통합운용 도입

조직과 규모가 작아 자산운용 체계를 구비하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에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OCIO)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통합운용(Pooling)을 통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자자산 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 자산운용 전주기를 위탁 관리하고, 소규모 기금 담당자는 수입·지출 관리 등 기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회계·기금간 여유재원 통합 활용 극대화

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재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확대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3. 투자재원 다변화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1) 추진배경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까지 753개, 132조원 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최저수입보장제도(MRG) 폐지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위험은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 투자로 유도하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 소요가 급증한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 추진방향

■ 신규 민자사업 지속 발굴

2020년 3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 53개 유형으로 제한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민자방식 대상사업이 확대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 내진보강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을 발굴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포괄주의 이전에도 민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였던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기존유형 민자사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2020년에 목표하였던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에 추가로 7.6조원 + α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도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간 소요되던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4~6개월)하는 한편, 민간에서 민자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공하는 가점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추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교육을 강화하여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부담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민자사업은 인프라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공모방식에 비해 사모방식이 관리와 모집이 용이하여 대다수의 민자사업은 사모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최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하고, 민자사업의 과실(果實)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인프라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국유재산 활용 확대

(1) 추진배경

국유재산 정책은 재정 상황, 국민 수요 등 정책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처분 위주의 정책이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는 소극적인 유지·보존 정책 위주였던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 중심의 개발·활용'에서 국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개발·활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변화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최대한 유지·확보하고, 적극적 개발을 도모하여, 이를 통한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둘째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제공하고, 셋째로는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국유재산 주요 정책성과】

- ① 국유재산 총조사('18년) → 유휴 행정재산 5.7만 필지 용도폐지('19~'20)
- ② 토지개발 제도도입('18), 선도사업 대상지 11개 선정('19), 사업계획 승인('19~)
- ③ 공익적 활용 확대
 - 사회적 경제기업 인하(5→2.5%) 및 소상공인 사용요율 인하(5→3%)
 - 청·관사 복합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16건, 2,900호)
 - 생활 SOC 확충 지원 : 영구축조 및 대부·매각 허용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부담 완화
- ④ 관리 효율화
 - 기부대양여 제도 개선 : 관리지침 제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4건)
 - 유휴 행정재산의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 사용예약 제도 도입 등

(2) 추진방향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11곳의 선도 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 토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노후 청·관사의 위탁개발 방식도 다양화하는 한편,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 리모델링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그린 뉴딜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국가시설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국유재산 임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SOC 시설 확충 지원을 본격화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국유재산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관련 무상귀속, 공공기여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관사 사용승인 관리강화, 도시계획변경 협의 강화 등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 국유건물 및 실효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기반 확충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발·활용 후보지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활용 국유재산 특례 규정에 대한 존치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4.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1)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고려해도 OECD 주요국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전환 등을 위한 지출 소요는 확대되는 가운데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 추진방향

■ 장기재정전망 실시 및 선제적 재정위험 대응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해 장래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0~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 재정준칙 및 재정지표 보완을 통한 재정위험 관리 강화

정부는 위기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상황과 국민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등의 보완지표 도입을 검토하여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와 같은 현행 총량 중심 재정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과거 재정적자의 결과인 이자부담을 제외하고, 현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 채무에서 대응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국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 파악 가능

2) 국고채 안정적 관리

(1)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 심화 등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국채의 중요성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고채 발행 물량의 원활한 시장 소화와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미래의 차환위험과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시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향

■ 국고채 발행물량의 원활한 소화 및 수요기반 강화

국고채 발행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단·중·장기 그룹별 발행비중 관리목표와 시장의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만기물별로 발행량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한편,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 중심의 PD 평가제도 개편, PD의 인수여력 보장 등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고채 수요기반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안정적 시장 운영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급격한 금리 변화 등 시장 불안정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중장기 발행량 증가에 따른 차환위험 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국고채 상환 스케줄을 감안한 적극적 조기상환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평탄화 하고, 주기적인 국고채 교환으로 국고채의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소통과 모니터링으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5. 재정관리체계 혁신

1) 성과관리제도 개편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2003년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현재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R&D 평가 등 재정당국과 개별부처 주관으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과관리 제도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이 형식화되고,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평가의 예산환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나아가, 평가제도·사업간 중복과 비효율성 증가로 부처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의 평가부담을 축소하는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 추진방향

■ 성과목표관리를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

현재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관리 대상은 단위사업까지이나, 이를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성과관리의 거시적·전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단위사업 기준의 미시적 관리 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적 프로그램 성과목표에 집중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 부처의 평가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목표를 미달성한 프로그램에 대해 원인과 대응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거시적·전략적 자원배분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다.

■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성과평가 결과가 지출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단위를 기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하향조정하고, 평가기준에 지출구조조정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예산환류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각 평가 제도별로 평가대상 규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부처의 평가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재정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체계화, 재정성과DB 구축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 ‘제6장 성과관리’를 신설하여 성과관리의 목적, 예산환류, 결과공개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제도별 성과정보를 포괄한 재정성과DB(Database)를 구축하여 성과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2)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자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의 역할 확대에 발맞추어 국가자산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추진방향

■ 국가자산 관리기반 마련

먼저 국가채권·토지·건물·물품 등을 포괄하는 국가자산의 개념을 정립할 예정이다. 불명확한 국가자산 개념을 탈피하여, 국가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자산의 개념과 연계하여 관련 법령들의 정비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가채권관리법」상 관리대상인 국가채권의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 통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이와 함께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들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총괄 관리기능 강화

국가자산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세외수입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해마다 발생하는 결손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차세대 dBrain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국가채권·국유재산·국고금 등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속한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이 출자 전환되어 누락된 비일상적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국유증권 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자산 가치 제고

국가자산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는 신설 시 사전심사, 일몰제 도입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여·무상귀속 등 자산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

(1) 추진배경

최근 공공조달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각 국은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OECD, EU 등은 사회문제 해결, 혁신 성장 지원 등을 목표로 조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약 135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관성적으로 구매하는 수동적인 조달관행이 존재하고, 이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수동적인 조달관행에서 탈피하여, 공공서비스 개선·혁신 성장 지원·정부 혁신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혁신구매목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방향

■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혁신제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공정한 선정절차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보건, 치안,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도입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혁신구매목표제’란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평가제도로, ‘21년도 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목표, 평가 방법 등을 매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혁신조달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하여 혁신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총괄할 예정이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기관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혁신제품 개념 정립, 혁신제품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범부처가 합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도를 통해 혁신조달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4) 공공계약제도 개선

(1) 추진배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계약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약 135조원으로 국내 GDP의 약 7.1%에 달하며 입찰 참여기업도 58만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공공계약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입찰·낙찰제도와 계약 조건 등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입찰·계약절차가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발주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지속되는 등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①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②공정계약문화 정착, ③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 계약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 공공계약 발주규모(단위: 조원) >

구 분	공사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	합 계
'13년	58.9	35.6	18.5	113.0
'15년	58.8	38.7	21.7	119.2
'17년	57.5	40.5	25.2	123.4
'19년	61.3	45.8	28.0	135.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추진방향

■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그 간의 경직적인 계약제도 운영에서 탈피하여 제도전반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계약·입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계약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이 전자적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조달대상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선택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적격심사 등 입찰절차에서 중복·불필요한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환경·건설 등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적정대가 지급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공정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를 의한 교체로 개선하고, 계약상대자의 소속근로자에 관한 과도한 관리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완화하며,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개선을 통해 계약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 간 기술·컨텐츠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 기술력·컨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차등점수 배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6.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1)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

(1) 추진배경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활동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을 2018년 2월 개편하였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회계시스템(일명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열린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재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2007년에 구축되어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IT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일부 업무는 수기로 관리되어 신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재정 및 공공 기관 간 재정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일부정보는 열린재정, 통계청, 공공 데이터포털, 지방재정 365에서 중복·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부처 및 기관에 산재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019년 하반기부터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재정·행정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 추진방향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재정관리 업무 효율화

확장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업무 집중시간에도 처리속도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사용자 상담 품질개선,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서비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지방, 교육재정, 공공기관 연계 확대

현재 여러 부처·기관에서 관리 중인 재정·행정 DB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재정정보 통합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적시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여 정책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포괄한 통합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현재 중앙재정(열린재정), 지방재정(지방재정365), 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별로 각자 공개 중인 재정정보를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한 곳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편 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2)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확산

(1) 추진배경

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을 통한 사업검토, 선호도 투표 실시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올해 정부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이하여 사회·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참여예산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업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국민들의 선정 과정을 거친 5개 이슈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1박 2일 현장 회의 등 대면숙의 과정을 거치던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 주요 개편 사항 >

(당초) 예산국민참여단 400명, 대면회의(1박2일) 진행 +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 선호도 조사 → 50:50 비율로 선호도 결과 산출
(개편) 예산국민참여단 2,000명 +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폐지
→ 선호도 조사 일원화 + 온라인 중심 사업 검토 및 숙의 후 선호도 투표 실시

향후에도 실질적 ‘국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

	'19회계연도		'20회계연도		'21회계연도(정부안)	
합계	38개	928억	38개	1,057억	63개	1,199억
- 제안형	38개	928억	30개	489억	43개	928억
- 토론형	-	-	8개	568억	20개	271억

(2) 추진방향

토론형 국민참여 대폭 확대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3~5개의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토론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연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토론시 이슈에 관한 제반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산국민참여단 역할 강화

예산국민참여단은 구성 후 통상 2~3개월 동안 사업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선호도를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참여단 임기 1년 동안 “사업숙성 과정 참여 → 사업 검토 → 사업선호도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별 사업의 숙성에서부터 사업내용 검토를 통한 선호도 제시에 이르기까지 예산국민참여단이 연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운영 체계 구축

참여예산제도는 그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맞춰 상반기 기간에 집중된 제도홍보와 사업발굴 활동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홍보활동과 사업숙성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제안자와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숙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숙성 과정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